

경제 정책 하면

나라경제

2009 August
nara.kdi.re.kr

8

하반기 나랏돈 이렇게 쓴다

이달의 이슈 4대강, 어떻게 살리나
집중토론 기름값 너무 비싸다구요?
인터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ISSN 1227-8033



B.C. 8000



B.C. 2000



14C



21C

사람을 위한 도구가 사람을 향한 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 뒤에는 도구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을 해하는 무기로만 사용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가 정한 가장 진보된 도구, 인터넷 - 세상을 더욱 이롭게 하는 도구로 바르게 사용합시다.

매운 맛에는 생의 향기가 있다

노인들의 깊은 주름살 속에는 청량 고추 한주먹을 한꺼번에 씹는듯한 인생의 매운맛이 숨겨져 있다. 아버지의 굽은 허리, 휘어진 어깨에도 높은 벼랑을 타고 오르는 험한대는 숨소리가 있다. 어머니의 굳은살 박힌 손가락에서는 건디고 건디며 참아 온 인내의 핏줄이 별장게 숨겨져 있다.

그렇다. 나이라는 것은 그저 먹는 게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그저 되는 게 아니다. 저 높은 나무 위에서 떨어져 뼈를 다치고 발목이 휘어지고 피가 흐르는 곤혹스러운 세월의 기파른 바람을 다 맞아야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늙었다고 말해선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불려야 한다. 우리가 꿈과 이상과 미래에 도전하는 일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저 산 너머를 넘기 위해서, 우리가 저 높은 나무를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저 넓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버려야 할 것은 쉽다는 안이한 생각이다. 살아보면 그렇다. 세상에는 개울 하나도 쉽게 건너지는 법이 없다.

도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강과 바다와 산과 높은 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오르고 건널 때 그것이 바로 도전이며 힘인 것이다. 도전은 빌리는 일이 없다. 바로 내 발로 내 의지로 걸어야만 하는 스스로의 내공이 준비될 때 우리 앞에는 도전이라는 출발이 이루어진다. 도전에는 도전의 통증을 견디는 최대한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백 번을 쓰러져도 만 번을 일어서는 힘을 필요로 한다. 안나푸르나 봉을 오



르다가, 히말라야 12좌를 오르다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 도전은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그 죽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 오르는 사람들을 나는 본다. **도전은 죽음을 넘어서는 일이다. 앞 사람의 죽음을 극복하며 그 산을 오르는 그 참담한 도전의식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꿈은 배고플지 모른다. 우리들의 이상은 굶주리고 있을지 모른다. 꿈과 이상을 노트에 적어 놓기만 하고, 말만 앞세워 놓고, 몸은 아직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있거나 마음만 초조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우리들 꿈과 이상을 배 끓리는 일이다.

도전은 반드시 우리가 그은 그 선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다. 가고 있다는 것,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것

이 바로 도전이다. 도전은 언젠가 그 선에 도달할 것을 우리가 믿기에 가능하다.

초심이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말이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초심을 잃어버린다. 무엇이든 오래되면 타성이 된다. 타성을 조심하지 않으면 초심은 녹슬고 만다. 그래서 도전은 육체의 약속이 아니라 정신의 약속이다. **■**



신달자 시인

1943년 경남 거창생. 1964년 '여상' 여류신인문학상으로 등단.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역임. 시집 <불현문자>, <아버지의 빛>, 소설 <물 위를 걷는 여자>, 수필집 <백치애인>, <그대에게 줄 말은 연습이 필요하다> 등이 있고, 1989년 대한민국문학상, 2001년 시와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Contents

매운 맛에는 생의 향기가 있다
신달자 시인

- 14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손웅기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서기관
- 16 **기업이 원하는 실용인재 키운다**
김재금 교육과학기술부 기획담당관
- 18 **우선순위는 문화격차 좁히기**
박소정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 20 **R&D 세제 지원, OECD 최고 수준**
문승욱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장
- 22 **긴급복지 지원 예산 1,533억 원 분다**
이창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담당관
- 24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계속된다**
정지원 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 26 **‘물과 함께 하는 국토 재창조’ 본 궤도에**
김경옥 국토해양부 기획담당관
- 28 **불공정 하도급, ‘하도급 119’로 막는다**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 30 **문제는 금리정책 변경 시기와 속도**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
- 33 **위기 극복 위한 재정지출 불가피**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08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대담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3
천천히
걸기
Reader's
Letter
6

pl4 특집 하반기 나랏돈 이렇게 쓴다

경제정책 해설

인터뷰



Vol.225 AUGUST

- 38 **보육비 지원,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문경호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사무관
- 40 **20대 기술명장을 기른다**
김영곤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장
- 42 **저작권 보호, 공유하되 '창조원천' 지켜라**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 44 **식별번호 누르면 10개 정보 당장 확인**
이상수 농림수산식품부 동물 방역과장
- 46 **117개 사업장에서 이산화질소 38% 줄여**
노희경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총괄과장
- 48 **이젠 보안의식을 업그레이드할 때!**
박철순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



- 67 2025년 물기근 국가 된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 68 강, 인간과 자연의 공생
안시권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 70 수질은 어떤 물을 담느냐의 문제
조석훈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수질개선팀 사무관
- 71 농업용저수지 늘려 가뭄·홍수 예방
이봉훈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세안급과장
- 72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전상덕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사무관
- 74 34만 개 일자리, 40조 원 생산 유발효과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 76 강 살려 도시 구했다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 78 건설효과보다 운영효과가 큰 사업돼야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 79 4대강 살리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34 [전봉관의 온고자신] 모르핀 권하는 사회
전봉관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 36 [경제뉴스 행간읽기] '국제 통화전쟁', 어슬픈 대처 안 된다
권순환 동아일보 논설위원
- 58 [일상에서 깨닫다] 윤희, 절반의 가능성
서정형 철학자
- 60 [김진호 교수의 금융갤러리] 저혈압과 고혈압
김진호 이화여대 경영대학장
- 83 [궁금하다 북한경제] "한국은행, 고생이 많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
- 84 [나는 한국에 산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닌 '똑같은' 사람들!
서지영 나라경제 기자
- 87 [나라 밖 경제] 불평등 심화되면 중산층 붕괴할까?
조현주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원
- 96 ['it' Book] '지루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
- 98 [시평] 수원성과 우리의 영혼
윤희숙 KDI 연구위원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박현정 신용지원팀

p66 이달의 이슈

4대강 어떻게 살릴까

연중 기획

디자인이 경제다

칼럼

집중토론

p50

정책 그 후

평생학습정책

80

그들은 바쁘다

92

지방이 좋다
춘천이 좋다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디자인 빅뱅의 시대, 승자는 누구?

김태호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한국산업디자인협회 회장

88

"디자인은 기술을 파는 기술"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90

기름값, 너무 비싸다구요?

김동석 KDI 선임연구위원
이종화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과장
이복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2

51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간편한 방법
백은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장

52 당동! 주문하신 강좌 배달 왔습니다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53 대학 안 가도 학위 얻는다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54 구리, 자기개발에 올인하는 도시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55 평생학습으로 직업 얻었죠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56 평생학습센터, 쇼핑센터·도서관에도 있다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57 평생교육은 가치를 전달하는 이어달리기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인재교육연구본부 본부장



Reader's Letter

정책 진단, 참 쉽죠잉?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된 정책이 잘 정착됐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 그 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기사는 참 유익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이용자가 마음에 드는 기관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송재하_대구 수성구 만촌1동

세계로 쭉쭉 뻗어나갈 우리나라 콘텐츠

'특집 - 서비스 산업, 키워야 산다' 중 콘텐츠 관련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류를 통해 우리의 문화 수준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기를 기대합니다. 그에 앞서 문제로 지적되는 불법 복제, 불합리한 유통 구조, 불공정거래 문제 등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은주_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나로호 발사, 우주로 향한 꿈

경제정책해설 '우주로 꿈을 쏜다'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우주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나로호 발사.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훈_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가법지도 무겁지도 않은 통화

이 코너는 14개 경제부처와 KDI가 함께 만든 경제정책지 나라경제 지난호를 놓고, 애독자와 전화로 이런저런 뒷얘기를 나누는 난입니다.



이번 달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생 두 딸을 둔 전업주부 이현재 씨(38·서울 신도림동)와 통화했다. 남편이 퇴근길에 나라경제를 들고와서 읽어 줘다가 정기독자가 된 케이스. "저야 나라경제 대신 가족 경제나 고민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가족경제야말로 나라경제를 모르고선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다. 정부 경제정책이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계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은 후 정책기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있다. "경제 뿐 아니라 환경이나 교육 칼럼도 아주 유익했어요, 특히 정부 관료들이 직접 쓴 글은 행간에서 정책 입안자의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나름대로 미래에 정부가 어느 부문에 집중 투자할런지 전망도 하게 되구요, 그게 나라경제를 구독하는 매력입니다" 지난 호에 선 이슈에서 '위기 이후 우리사회'를 다각도로 짚어보는 기획이 흥미있었는데 글들이 조금 딱딱한 게 흠이었다는 평이다. 내용은 알차고 풍성하되 읽기는 쉬운 글. 그것이 편집자가 찾고 있는 원고의 이상(理想)이다. 하지만 모든 이상이 그렇듯 알차고 잘 읽히는 원고를 찾아내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번 달 특집은 <하반기 나랏돈 이렇게 쓴다>로 잡아 각 부처의 재정운용방향을 살펴봤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부재정의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의 맥락을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달의 이슈는 최근 정부가 맹렬한 홍보를 시작한 <4대강 살리기>를 다뤘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을 만나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시행했을 때 오는 이득은 무엇인지, 반대 여론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관해 인터뷰했다. 집중토론의 주제는 <기름값, 왜 떨어지지 않는가>로 잡았다. 자동차 없이 사는 사람이 드문 시대, 휘발유 값은 가계지출의 중요한 몫이다. 기름값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정해지고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연중기획 <디자인이 경제다>에서는 인기작중 '소울'의 탄생과정을 함께 듣는다. 기술력이 일정 이상이 되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김영세 대표의 코멘트를 재밌게 읽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폭염의 한가운데에 와 있다. 저 태양의 뜨거움이 포도와 복숭아의 과육 안에 단물을 흠뻑 스미게 할 것이다. 8월이 가면 우리 또한 좀 더 성숙한 향을 얻게 될 것을 믿는다. 독자여분의 강렬한 여름을 기원한다.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나라경제

2009. 8 [제20권 8호 통권 225호]

발행 |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 현오석 KDI 원장
편집인 | 김교식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 김동률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홍보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윤성욱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조성찬 과학기술정책과장
외교통상부 윤상수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박성환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창호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김정옥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박동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가족부 노형욱 정책기획관
환경부 홍정기 정책총괄과장
노동부 권기섭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김경욱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정한근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경각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 김의택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편집장 | 김서령 KDI 경제정보센터
취재·편집기자 | 공은주, 안선경, 권기대, 표초희

배포 | 김경숙, 김정철

발행처 | KDI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02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 02-958-4656, 4654
팩스 | 02-3295-0744
홈페이지 | <http://nara.kdi.re.kr>
e-mail | nara@kdi.re.kr

발행일 | 2009년 7월 31일 (매월 말일 발행)
제20권 8호 (통권 225호)
등록일 |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 02-958-4664
광고 문의 | 02-958-4667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312
구독료 |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 |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주)
인쇄 | 삼화인쇄(주)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5가지 방법



청결 유지

- ✓ 식품을 다루기 전과 조리하는 중간에 손을 자주 씻으세요.
- ✓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 식품 조리 사용하는 모든 기구 및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세요.
- ✓ 조리장소와 식품을 곤충, 해충 및 기타 동물로부터 보호하세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미생물은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일부 유해한 미생물은 토양, 물, 동물 및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해한 미생물은 손, 행주, 조리기구, 특히 도마를 통해 옮겨질 수 있으며, 경미한 접촉으로도 쉽게 식품에 옮겨져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의 분리

- ✓ 익히지 않은 육류, 가금류 및 해산물을 다른 식품과 분리하세요.
- ✓ 칼이나 도마 등의 조리도구는 가열한 식품과 비가열 식품용으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세요.
- ✓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식품은 별도의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왜 그럴까요?

가열하지 않은 식품, 특히 육류, 가금류, 해산물 및 그 육즙에는 유해한 미생물이 있을 수 있어 식품 조리 및 보관 중 다른 식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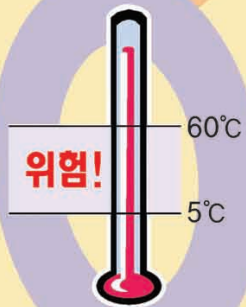


완전히 익히기

- ✓ 식품, 특히 육류, 가금류, 계란 및 해산물은 완전히 익히세요.
- ✓ 스프 및 스튜와 같은 식품은 반드시 70°C까지 가열하세요.
- ✓ 육류나 가금류의 경우에는 육즙이 분홍색을 띠지 않고 맑게 될 때까지 가열하세요.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조리되었던 식품은 완전하게 재가열하세요.

왜 그럴까요?

적절하게 가열하면 유해한 미생물은 대부분 죽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식품을 70°C까지 가열하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진 고기, 구이용 고기말이, 뼈가 붙어있는 고기 및 통째로 조리된 가금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기

- ✓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 조리한 식품 및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5°C 이하)
- ✓ 조리한 식품은 먹기 전에 뜨거운 상태(60°C 이상)로 유지하세요.
- ✓ 냉장고 안이라도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마세요.
- ✓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실온에서는 식품 중 미생물이 매우 빨리 증식할 수 있습니다. 보관온도를 5°C 이하나 60°C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미생물의 증식은 둔화되거나 중지됩니다. 그러나 일부 유해한 미생물은 5°C 이하에서도 여전히 증식합니다.



안전한 물과 원재료 사용하기

- ✓ 안전한 물을 사용하세요.
- ✓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 ✓ 살균 우유와 같이 안전하게 가공된 식품을 선택하세요.
- ✓ 특히 과일이나 채소는 가열조리없이 그대로 먹을 경우, 잘 씻으세요.
-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사용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물과 얼음 등을 포함한 식품원재료는 유해한 미생물 및 화학물질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상된 식품이나, 곰팡이 핀 식품에는 유독한 화학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식품원재료 선택시 주의를 기울이거나, 세척 및 껍질 벗기기 등과 같은 간단한 처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 터 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대담 :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때 : 2009년 7월 13일 오후 3시

곳 : 장관 집무실



1953년 경남 창원 生
서울대 공과대학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199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0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2008년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09년 2월 행정안전부 장관

일자리 주고, 희망까지 준다

김서령 : 취임 5개월 어떻게 보내셨나, 안색이 좋아 보인다.

이달곤 : 행정안전부는 민생과 가장 직결돼있는 곳 아닌가. 얼굴은 좋아 보여도 늘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어제 내린 비로 홍수 피해가 생겨 상황실에 가봐야 한다. 수원, 화성 지역에 피해가 있다는 소식에 지역 이장에게 바로 연락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상황이 어떤지 파악했다. 요즘 행정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여름 끝무렵에는 태풍이 올라올 수 있어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 8월말에는 을지훈련도 새롭게 기획하고 있다.

김서령 : 을지훈련이라면 해마다 하던 훈련인데 이전과 다른 점이 있나?

이달곤 : 전에는 군사훈련만 했는데 올해는 전시에 민간이 어떤 방식으로 대비할지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훈련을 해보려 한다.

김서령 : 일반인에게 전시훈련을 하면 거부감이 크지 않을까.

이달곤 :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겠다는 충정이 전해졌으면 한다. 여러 상황에 대비한 ‘안전, 안녕, 안심’ 3안(安)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김서령 : 올 핵심 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자체 통합 등을 내세웠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이달곤 : 일단은 풍수해에 대비해 국민생활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하반기에 진행할 주요 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25만 명을 위해 실시하는 긴급 복지지원 프로그램이다. 전국 2만5천여 개의 사업장에서 11월까지 운영된다. 물론 훈련 받지 않은 각각의 개별 대상을 모집하고 지원하다 보니 미비점도 있다. 대상 선정이 잘못됐다, 근로강도가 너무 낮다, 쿠폰 지급이 비효율적이다 등 지적이 있는데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중이다. 1가구 내에 최소 1인은 일하게 해 가정을 지켜주자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

일본, 미국, 대만, 호주 등은 내수 진작을 위해 현금이나 소비쿠폰을 전 국민 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우리는 일

자리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임금의 일부를 소비쿠폰으로 지급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계획이다.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외의 곳이라면 소비쿠폰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허용업체를 확대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교환할 수 있는 은행도 늘리고 있다. 쿠폰을 배포한 지 일주일 됐다. 실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서민 경제를 위해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김서령 :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홍보도 많이 하시던데.

이달곤 : 전 국민이 다 알기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면 된다. 246개 지자체가 최저생계생활자, 차상위계층 명단을 확보하고 1대 1로 접촉해 일하게 한다. 실제 만나본 근로자들 반응은 11월까지지만 한다는 걸 몹시 아쉬워하더라. 희망근로자의 분포는 60세 이상이 45%, 65세 이상이 35%정도다.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층이 많다는 뜻이다. 이들은 희망근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더 오래 유지되길 바란다. 정부 입장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더 신경이 쓰이는데 일하면서도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려고 한다.

김서령 : 현장에 자주 나가시나?

이달곤 :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챙겨 나간다.

김서령 : 장관께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을 직접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주요 사업이라 하셨는데?

이달곤 : 최근 여러 지역에서 시·군·구 간의 통합이 논의되고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요구도 있다. 지역별로 인구 규모가 달라 행정서비스에 차등이 생기고, 농어촌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세수가 줄어 산업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기초자치단체부터 자발적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그러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자율통합을 이루고 나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중기청 등 여러 부처가 통합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서령 : 주민들이 실제로 통합을 원하나, 통합의 이득은 뭔가?

이달곤 :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나 버스 할증, 묘지 조성, 학군 배치 등등 여러 측면에서 통합을 원하는 곳이 있다. 또 지역이 뭉치면 정부 입장에서는 경찰청이나 교육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2중, 3중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니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크다.

줄어든 비용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투자할 수 있어 결국 주민들에게 이득이 간다.

김서령 :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지방은 하반기 예산이 거의 바닥났다는 보도를 접했다.

하반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이달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 상반기 목표액이었던 110조 원을 넘어 117조 원을 집행했다. 그덕에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었다.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 기초는 하반기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용재원 감소, 지방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고,

지방채 발행을 적극 유도해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방침이다.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일정부분 이자를 보전하는 등의 지원도 실시할 것이다.

김서령 : 부처 내부 조직개편이 대략 마무리됐다고 들었다. 행정의 효율성이 더 높아졌나?

이달곤 : 지난 3월부터 추진된 이번 개편은 크게 2단계로 이뤄졌다. 변화된 정책상황을 반영하고 비상경제체제의 정부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위 조직 개편이 있었고, 5월말로 과 단위 하부 조직까지 기능 위주의 개편이 있었다. 그동안에는 과별, 국별로 일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을 과감히 줄였다. 일원화된 조직에서는 과장이 기존 국장의 업무까지 맡는데 해당 과의 장이라면 업무는 물론이고 조직에 있어서도 전문가고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

적이고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김서령 : 조직통합에 따른 혼란도 예측한 건가? 인권위 인력 감축을 두고 논란이 많던데.

이달곤 : 정부 조직 개편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위 조직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있긴 했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다. 장애인차별을 다루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

당 부서 인력은 더 늘렸고, 당초 폐지를 검토했던 지역사무소 역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고려해 그대로 두었다. 반면 총리실이나 통일부는 인력을 크게 감축했다.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다. 비용대비 효과가 더 크다면 익숙하지 않은 변화라도 받아들이는 게 옳다. 당장의 혼란이 비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혁신과정이기도 하다.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은, 특히 살림을 살아야 하는 행정안전부는 조용히 맡은 일을 해내는 부서다. 엄마가 우리 아들이 어디가 문제 있다고 떠들고 다니나. 아니지 않나.

김서령 : 장관을 만나러 오는 중에도 광화문 일대에 경찰과 경찰차가 과하게 눈에 띄었다.

다. 정부가 되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이달곤 : 옛날에야 경찰을 보면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경찰을 보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나. 정부는 국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지켜줄 것을 적극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시민들이 이러한 법질서를 어겨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교통을 방해하고, 허가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 시내에 경찰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 시내를 찾는 하루 3~5만 명의 외국 여행객들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여기겠나. 경찰들도 과도한 노출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수하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입장을 바꿔놓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직접 체험하게 하고 싶다. 경찰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 데이트도 하고 어떻게 시위를 하면 좋을까 토론도 하면서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갈 계획을 갖고 있다.



김서령: 경찰의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

이달곤: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봐

야지 왜 경찰에 대한 이미지부터 언급하는지 참 답답하다.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경찰은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판단해 움직인다. 국민 전체를 위해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점만큼은 확고하다. 과격한 불법 폭력 시위를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갈 것이다. 딱딱하게 비춰지는 모습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김서령: 현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달곤: 역대 이렇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가 있었다. 인터넷, TV 등 채널이 얼마나 많은가. 모든 것이 다 보이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소통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 하나까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겠나. 소통이 안 된다고 말하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좀 더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서령: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식은 뭔가?

이달곤: 이전 권위주의 시대와는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민주화시대, 사이버시대. 온라인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NGO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 사업평가, 정책체험 등 다양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엔 보안 등의 문제로 국민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정부의 여러 상황을 경험해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을지훈련이나, 경찰 체험도 같은 맥락이다. ‘일 잘하는 지식정부’, ‘창의적 소프트웨어’ 등을 모토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처리나 대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치중해왔다면 ‘신뢰의 정보사회’ 마련을 위해 국민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김서령: 송례문 화재 이후 우리 문화재 방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현 소방방재 시스템은 믿음만한가?

이달곤: 문화재 방호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전국 목조 문화재 143개 시설에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 이 중 불량한 23개 시설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145개소와 중요 목조문화재 2,238개소에 대한 화재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반기별로 한 번 이상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재 구조나 특성을 미리 알아야 화재 진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조건축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대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세계적으로 우

리 문화재가 인정받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받는 문화재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를 도입해 배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서령: 취임 후 여러 차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나?

이달곤: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모든 사업에 연관 안 되는 일이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다. 경작지 보상문제의 경우 지방국토청별로 보상지원센터를 설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업체의 입찰 대상 공사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참여를 늘릴 방침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시급한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강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하는 종합 프로젝트다.

김서령: 행정안전부의 비전이 선진일류국가라고 하는데 장관이 생각하는 선진인류국가, 선진행정이란 무엇인가?

이달곤: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편안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가 선진일류국가다.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총비용관리제와 유연근무제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민간 상호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동체대비(同體大悲)’. 나와 너를 한 몸과 같이 대하면 크게 자비롭다는 뜻이다. 조계종 종정이었던 해인사 법전스님이 얼마 전 써주신 말씀이다. 크게 감동 받아 집무실에 걸어놨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성을 가지고 하나씩 바꿔 나가면 된다고 하시더라.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아픈 것들을 챙기고, 국민은 정부 정책에 협력하면, 경제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발전할 수 있다. 결국 선진행정이라는 것은 정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법륜



누군가의 심장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반기 나랏돈 이렇게 쓴다

특
집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회복 속도와 지속성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물가와 민생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당분간 시중 유동성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책기조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부처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경제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을 『나라경제』와 함께 찬찬히 살펴본다.



기획재정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 재정 측면에서 지난해 말 10조 원 규모의 수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28조4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급격한 경기위축을 보완하고자 했다. 통화금융정책 면에서는 여섯 차례의 금리 인하와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했다. 일자리 나누기·청년인턴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생계 및 주거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했다. 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건설·조선·해운 등 부실업종과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며,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구조조정기금도 마련했다.

정부의 이런 적극적 대응으로 최근 다른 나라보다 일찍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들에서 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며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정부의 상황인식이다.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는 적극적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침체속도가 완화되고, 2010년부터는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하반기 이후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산업생산의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노후 차 교체 지원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 증가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해 2/4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내외 불안요인들로 인해 경기회복 속도와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고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효과도 상반기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회복속도 또한 느릴 것으로 예상돼 수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리스크, 사회갈등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지난 6월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올해 경제전망치를 다소 수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당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5%로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당초 16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늘려 잡았다. 연간 취업자 수는 경기개선 추이, 일자리 대책의 효과 등을 고려해 당초 전망(연간 20만 명 감소)보다 다소 개선된 10~1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 정부가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경제운용방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기회복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올해 들어 우리 경제상황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 이런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수 있을지 자신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exit strategy)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책기조의 전환이 너무 빠르면 경기회복세를 저해해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인플레이션·자산시장 버블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런 판단이 요구된다. 부동산시장은 거래량, 가격,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시
정책기조의 정상화(exit strategy)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에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추경에 포함된 일자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등 제반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ی겠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고자 한다. 앞으로 경기가 다소 나아지더라도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달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난 6월말 발표했다.

셋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부문별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나가겠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40조 원의 구조조정기금 등을 토대로 금융권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겠다.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등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도 필요하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2년)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비정규직법을 정비하는 한편, 파견근로 허용업종(현재 32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넷째,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R&D 투자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의료·미디어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부품·소재 등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일부 지표가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서 경기회복을 자신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경기 회복 추세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한편,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소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각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내는 것과 함께 이제는 위기 이후에 우리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세계경제 무대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윤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는 경기 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서기관
wksohn@mof.go.kr

교육과학기술부

기업이 원하는 실용인재 키운다

정부가 지난 6월 25일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기존의 정책기조 유지와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제도개선은 현재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먼저,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가는 현실에서 높은 등록금은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현재 또는 미래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 오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1.5%p 인하할 예정이다.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할납부제·카드납부제 확대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날로 치솟는 학원비도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온라인 고액 수강비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운영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최대한 안정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 사교육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서울시교육청에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한 휘문고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 공부를 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위기 극복 이후 다시 뛰어 오를 힘을 잃게 된다. 정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미래지향적 기초·원천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자력, 기후변화 대응, 이산화탄소 저감 등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늘리겠다.

경기침체로 위축되는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 R&D 투자 전반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목표를 현상공모하고 이를 달성한 연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포상금제도도 도입한다. 벤처연구소 인정 요건 완화, 정부지원사업과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촉진 등 기업 R&D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구소의 기술을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연구장비나 설비의 활용도를 강화하는 등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산학연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의 또 다른 축은 우수한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학교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차 지정을 마친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 고교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자율형 사립고를 처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별학교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직원 임용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을 통해 학교의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도 구조개혁과 자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기업이 원하는 실용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여건이 되는 국립대부터 법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학은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판정하고 퇴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대학 내 산학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을 두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위기는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만 매달려 있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감소시
킴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겠
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과 후 프
로그램 등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운영해 사교육비를 줄
이고자 노력하는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금
교육과학기술부 기획담당관
jkkim0328@me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우선순위는 문화격차 좁히기



문화체육관광부와 송파구가 지난 4월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공동 주최한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중국수호 디딤무용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상반기 우리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질가계소득은 감소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가계소득의 감소는 문화여가비 등 문화예술 및 체육소비 활동을 위축시키고, 문화향수의 격차를 더 벌려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009년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문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를 통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주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문화부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정책기조를 이어 무엇보다 문화복지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1세기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MICE·융합관광·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할 내수 진작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소득·지역의 격차가 문화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장애인·노인·농산어촌 지역민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낙후지역, 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중소기업 등 소외계층 20만 명, 소외지역 학교 350여 곳에 문화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30여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5만 원 한도 내에서 공연·전시를 무료 관람하고, 스포츠시설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스포츠바우처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중소기업근로자와 수능 수험생이 향유할 수 있는 '생활공감 문화열차'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복지시설, 임대아파트 등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초·중·고교생 및 교사들이 공연티켓을 10~40%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 할인제도도 지속 추진하겠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연 170개 소), 국민 레저활동 증가를 반영한 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연 8개 소), 도시인의 생활 특성을 반영해 체육시설 야간조명 설치(연 100개 소) 등 국민 생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 생활체육 공공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증원 배치(2012년까지 2천 명)할 계획이다.

둘째, 대표적인 녹색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전체 GDP의 0.5%를 차지하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겠다.

콘텐츠 산업은 연 평균 5.4%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낙후된 유통구조, 불공정 거래 관행, 안정적 자금 확보 곤란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화부·검찰·경찰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 보호 TF'는 효율적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영화 및 온라인 콘텐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을 유도한다. 콘텐츠 분야 투자 활

성화를 위해 '콘텐츠가치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금융기관 및 투자자에게 공신력 있는 투·융자 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의 강점분야를 관광과 연계한 고수의 복합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한다.

전시·컨벤션과 관광을 연계한 MICE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전시컨벤션 육성협의회'를 통해 체계적 정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 '글로벌 MICE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MICE 스타 브랜드 육성을 추진하겠다.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의료관광을 신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 비자발급·출입국·병원예약·관광·숙박 등에 대한 정보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갯벌·DMZ를 활용한 생태관광자원을 조성하고,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과 쇼핑을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상설공연장을 조성하고, 명품아울렛의 해외홍보 등 연계상품 개발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통한 내수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확대,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 관광투자 활성화, 지속적 점검을 통한 지역 수용태세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문화부 등 11개 부처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無더위 夏夏好好 여름휴가 캠페인'을 추진하고, 공공·민간부분의 휴가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촉진할 예정이다.

미국은 대공황 당시 문화부문에 대한 지원을 활발히 해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경제가 위축될수록 국민을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문화부는 하반기에도 국민과 함께 문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 박소정

문화부는 무엇보다 문화복지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정책 하면 『**나라경제**』

KDI는 국가적 어젠다에 대안을 제시하는 종합정책 연구기관으로
14개 경제부처와 함께 경제정책 일간지 『나라경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박소정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sportsinfo@korea.kr

지식경제부

R&D 세제 지원, OECD 최고 수준

최근 OECD 경기선행지수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회복단계를 넘어 균형수준으로 회복하는 시점이 임박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경기가 좋아질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가 회복과 환율 안정, 큰 폭의 무역흑자 지속 등 일부 실물지표 또한 우리 경제의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미국, EU 등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기 회복의 핵심 지표인 투자와 일자리는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번 위기는 금융위기로 출발했으나 실물분야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GM 대우의 파산, 일본기업의 적자 심화 등 글로벌 산업구조에 전에 없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정밀한 점검과 치열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올해 하반기 지식경제부의 실물경제정책은 크게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미래 대비를 위해 기업투자의 활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둘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7월 2일 제 3차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회의를 통해 정부는 강력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OECD 최고 수준의 R&D 세제지원책을 도입해 기업 R&D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린 카, 지능형 로봇, 바이오 제약, 청정 석탄에너지 등에 이르는 총 26개 스마트 프로젝트 추진과 총 6,500억 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을 통해 '신수종 사업(편집자 주: 新樹種事業, 미래에 새롭게 키워나갈 종류의 사업을 말함)'에 대한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겠다. 특히 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지식자산화사 설립, 서비스 R&D 종합 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진흥정책 등 관련 지원제도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100대 중점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을 선정해 해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기업들의 투자 모멘텀이 지방으로 적극 확산되도록 총 3년간 20개 사업에 9천억 원을 투자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변화하는 세계 무역시장 구도 내에서 우리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수출 전략 마련에 노력하겠다. 경제위기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중국시장은 위축된 선진국 시장의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농촌구매지원(家電下鄉)'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겨냥해 프리미엄급 완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의료·문화콘텐츠 등 중산층 이상에 대한 서비스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는 등 지역별로 특화된 정교한 시장진출 방안을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금융과 해외 마케팅에 총력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2008년 130조 원에서 2009년 170조 원으로 40조 원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수출중소기업, 선박·플랜트 분야와 해외자원개발에 전략

미래 대비를 위해 기업투자의 활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둘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은행의 수출보험 접수 대행과 중소기업 전용보험 등 수출보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 약 1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수출 상담회인 'Buy Korea Autumn' 을 오는 9월 개최할 계획이며, 수출 성과가 높은 해외 전시회를 새로 발굴하고 참가 지원 규모도 확대할 것이다.

셋째, 환경문제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 구조 개선에도 노력하겠다. 1만 개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진단, 선진국 수준의 획기적인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공공기관에 대한 LED 조명 교체 의무화 등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겠다. 자동차·조선 등 9대 주력산업에 녹색기술을 접목해 기업의 환경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녹색표준 개발, 생태산업단지 확대 등으로 기업 활동 전반의 녹색화를 가속화하겠다.

해외자원 가격 하락이라는 기회를 활용해 유전·가스전을 확보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총 1조 원 규모의 자원개발 사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여부자금의 자원개발 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중남미·아프리카 자원부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 개최와 고위급 방문·조사단 파견을 통해 패키지형 자원협력을 강화하겠다. 서민용 전기·가스 요금 동결, 3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세 인하, 2013년까지 경북 상주 등 40개 시·군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같은 서민생활 보호 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다들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며, 위기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힘쓰고 공격적인 투자로 내일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반도체, LCD, 조선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우위는 1990년대 불황으로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투자에 주춤할 때, 선제적 R&D와 설비 투자로 확보된 것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도 과거와 같이 모험과 도전으로 정의되는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요구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10월 약 2주간을 '기업가정신 주간'으로 정하고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 비즈니스 플랜 정연대회 등 기업가정신의 발현·확산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세계 5위 이내의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 등의 여건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을 신뢰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끊임없는 위기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활용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올 한 해가 경제 재도약의 토대가 될 것을 확신한다. 



지난 6월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2009 매출 1000억 벤처기업 시상식'에서 매출·영업이익 등에서 높은 실적을 올린 회사들이 지식경제부장관상, 특허경영 최우수기업상 등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NHN 최성호 이사, 골프존 김원일 부사장, 청우테크 조시완 대표, 이엔케이 이승복 전무,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 홍승우 부장, 엠텍비전 이성민 대표, 한국단지공업 이원준 사장



문승욱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장
moonsw21@mke.go.kr

보건복지가족부

긴급복지 지원 예산 1,533억 원 푼다

만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는 계절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한파가 국민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최근 서민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주가·환율 등이 안정되는 등 경기급락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경제위기로 가계소득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다른 계층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빈곤층이 증가하고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돼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위기는 서민의 장바구니와 가계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이나 이혼율, 자살률 등 사회지표 전반에 영향을 준다. 경제위기가 가시화된 2008년도 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1.19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건수도 1만6천 건 줄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5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난 6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될 보건복지가족정책을 4가지로 나누어 정리했다.

우선 복지분야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긴급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같이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다. 전국 46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장 6개월간 매월 12만~35만 원씩 총 4,18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은 없으나 주택 소유 등으로 재산기준이 초과돼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겐 재산을 담보로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억 원 이하 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 20만 가구가 대상인데, 생계비는 일시불로 5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경제위기 이전에는 긴급복지 지원 요건이 사망, 가출, 화재 등으로 제한적이었지만 올해부터 휴폐업, 부상, 질병, 실직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를 위해 2008년 378억 원이었던 긴급복지 지원 예산을 1,533억 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둘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담보 대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라고 불리는 저소득가구 소액 무담보 대출사업은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자금의 대여와 함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활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당초 1만1천 가구에 1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대폭 늘려 3만1천 가구에 330억 원을 하반기부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9월부터 '사랑 카드' 제도를 도입해 간접 지원했던 보육보조금이 부모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 심정동에 위치한 린나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우리 가족'을 그리고 있다.



터 지원한다.

또 서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고용취약층이나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추경예산을 통해 722억 원 늘렸다. 65세 이상 노인들도 안정적인 소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도 277억 원 증액했다.

셋째, 서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의료비는 예산과 보험재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50% 감면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소득에 따라 차등해 평균소득 이하의 서민들이 더 많은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6개월 동안 환자 본인이 내는 진료비 상한액이 12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0만 원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은 6개월간 200만 원이던 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 6월부터는 의료기관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15%에서 10%로 인하됐다.

7월부터 138개 질환군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외래·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었다. 올해 말부터는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물리요법도 보험이 적용된다.

저소득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지역보험료 1만 원 이하 세대에게는 보험료를 1년 동안 절반으로 경감해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넷째로 서민과 중산층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 임신·출산 지원이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된다. 7월부터는 0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 22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에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세 아동을 가진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에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9월부터는 'i사랑 카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보육보조금은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됐지만 9월부터 'i사랑 카드'를 통해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므로 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다. 2009년 12월까지의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를 도입해 부모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시설 여건이 마련되도록 했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7월부터 혜택을 확대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자라나도록 돕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220만 원에서 평균 32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늘렸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가족부는 기본적인 생계지원부터 의료, 일자리, 출산과 아동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계속 발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장애인 같이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다. 전국 46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장 6개월간 매월 12만~35만 원씩 총 4,18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가구 계층별 소득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9.1/4	-5.1	0.7	1.3	1.0	1.1



이창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담당관
june@mw.go.kr

노동부

취약계층 일자리대책 계속된다



노동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대책의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평가한다. 지난 6월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열린 2009 희망근로사업 발대식에서 일자리를 배정받은 참가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전례 없는 경제·고용 위기를 빠른 시일에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일부 실물지표는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희망근로 등 정부지원 일자리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지난 6월에는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였던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업자 증가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물론 주요 기관에선 올해 연간 취업자 수가 순증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용은 경기의 후행변수로, 과거 외환위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기가 저점에서 회복된 후에도 1~2분기가 지나야 본격 회복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추경사업을 비롯한 저소득층·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대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의 고용위기 극복과정을 체계화해 앞으로 정부의 고용정책 선진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노동부에서는 정책과 예산이 누수·낭비·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대책의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반영할 것이다. 또,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도록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일모아(<http://www.ilmoa.go.kr>)'도 강화하고 있다.

재직자와 근로자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수요자 위주로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직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는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실직자 훈련에서 재직자 훈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계좌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했으며, 계좌제 실시 이후 7만 3천여 명이 계좌를 발급받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질 높은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직업훈련정보망(HRD-Net, <http://www.hrd.go.kr>)을 범정부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털로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포털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추가 고용기회를 주고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단시간 근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단시간 근로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적용할 여지가 많은 교육·보건·사회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모형 개발을 지원하겠다.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일모아(<http://www.ilmoa.go.kr>)

구직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이용하는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는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실직자 훈련에서 재직자 훈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기반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인력수급전망이 실시됐지만 총량전망과 각 부처의 부문별 전망이 서로 달라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고, 정책 수립과 취업지원서비스 자료로서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인력수급전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산업별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과 미래산업 개편에 따른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위기로 주춤했던 노동시장 법·제도 선진화에도 전력을 다하려 한다. 2010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지는 지난 13년간 유예돼 온 사항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현재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체계 개선 및 전임자 급여지급 제도의 개선 문제는 노사정위원회 내 노사관계 선진화·구성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경제산업 구조와 고용관계를 반영하지 못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제도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 논의의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임금근로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내년 이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관계 법·제도 개혁은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틀을 다져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취약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필수과제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 **박희**



정지원
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jjweon@molab.go.kr

국토해양부

‘물과 함께 하는 국토재창조’ 본 궤도에



지난 5월 인천 서구 시천동 경인 아라뱃길 공사현장에서 열린 ‘경인 아라뱃길사업 현장보고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토해양부는 2009년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 ‘물과 함께 하는 국토재창조’,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수립하고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상반기에 전체 예산 23조4천억원의 68.2%인 15조 9,588억 원을 집행해 당초 집행목표 65%를 초과 달성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6월 8일), 경인 아라뱃길 사업 본 공사 착공(6월 30일) 등 ‘물과 함께 하는 국토재

창조’를 위한 핵심과제도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미분양 해소 및 유동성 지원대책 등과 함께 건설산업과 해운산업 제도개선 등 굵직한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1월 발표한 녹색뉴딜 9개 핵심과제 중 국토부 과제로 6개를 반영하는 등 녹색성장기반 조성과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경제를 정상화하고 어려운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국토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불필요한 이월이나 전용 등을 최소화하려 한다. 하도급 대금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고, 주요 공공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현장까지 파급되도록 노력하겠다.

주택시장 안정화도 노력 중이다. 자금 흐름과 담보대출 동향, 가격과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필요시 적기 대응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 촉진(연내 1만 호) 등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겠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민간부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환매조건부 매입규모 확대, 미분양 리츠·펀드 활용 등 미분양 주택 활용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생활 지원대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9월 보금자리주택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서초 우면, 고양 원흥 등 시범지구에서 첫 분양을 할 예정이다.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특별공급물량 외에 우선공급물량도 5%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물량을 3%에서 10%로 늘리고,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사업 시범단지를 현행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며, 도시서민 밀집지역에는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다. 이 밖에 도시민 내항여객선 이용 운임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도 확대하며, 건설근로자 4대 보험료의 하도급 공사비 반영 등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지난 겨울 극심한 가뭄과 지난달 전국을 강타한 집중 호우에서 보듯이 예기치 못한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고 있다. 물 문제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효과적인 물 관리 방안이 중요해 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홍수와 가뭄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며, 친수·문화 공간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강을 강답게' 만드는 핵심 사업이다. 올해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면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2011년까지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 정비 등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통·물류 체계의 효율성도 높ی겠다. 첨단 복합환승센터 설치, 항만·공항·산업단지 등 거점 중심의 교통·물류망 연결도 추진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BRT 시범사업(2010년 하남~천호, 2012년 청라~화곡),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수도권 7개구간), 대중교통 전용 지구 시범조성사업 실시(올 12월, 대구시) 등을 추진 중이다. 춘천~동홍천 고속도로 개통, 중앙선 국수~용문간 복선전철 개통 등 기간 교통망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 신항, 부산항 신항 준공, 제주공항 등 항만·항공 시설의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경쟁력 강화, 제3자 물류 활성화, 해외 물류네트워크 개척 등 물류산업의 선진화도 적극 추진 중이다.

기업의 입지 지원을 위해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장항 등 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대 산업단지(2009년 250만㎡)도 차질 없이 공급 중이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등 도심 주거환경 정비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람회장 착공, 기반시설 확충 등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를 대비한 정책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형 그린 홈 시범사업 착공(2009년 10월 세종도시 첫 마을),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시범 도입(2009년 12월)을 추진하고, 저탄소 수송수단의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철도 고속화, 연안해운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 자기부상열차 상용화(인천공항~용유역 시범노선 착수), 4인승 소형 시제 항공기 제작, 초장대 교량과 초고층 복합빌딩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시화조력발전소,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등 해양 자원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되면서 국토해양부는 육·해·공을 모두 아우르며 명실상부하게 국토 전체를 관리하는 부처가 됐다. 업무의 범위가 다양해진 만큼 국민들을 보다 살기 편하게 하고, 국토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이와 같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도 국토해양부는 전 직원이 합심해 한 치의 과오 없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호

주택시장 안정화도 노력중이다. 자금 흐름과 담보대출 동향, 가격과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필요시 적기 대응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 촉진(연내 1만 호) 등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겠다.



김경욱
국토해양부 기획담당관
kkw034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하도급 119’ 로 막는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초래된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했다. 그리고 세계의 경기 침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서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격·품질과 같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국내의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하고, 상품 비교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독과점 공기업의 불공정관행도 집중 조사해 시정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들어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그리고 IT·제약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을 5대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시장 감시를 강화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시장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대기업의 출자한도를 제한해 사전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던 출자총액제를 폐지했고,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 도입으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하반기 세계 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경기침체 속도가 완화되고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가상승 전망, 추가 금융부실 가능성, 인플레이션 우려, 북한 리스크, 사회갈등 등 잠재적 불안요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2009년도 추진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서민·중소기업 피해방지를 위한 업무에 꾸준히 매진할 것이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작업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우선 음료회사의 담합행위, 대형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를 밀어내는 행위 등 중점 감시업종에서의 반칙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독과점화 돼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점검 비상TF’를 운영해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다단계, 전자상거래, 상조업 등의 분야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상습 위반업체를 조사하고 ‘하도급 119’를 운영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새로 도입해 하도급 거래에 만연된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고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란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가 구두 발주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

전통적으로 독과점화 돼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점검 비상TF’를 운영해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의 경기도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백용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세용 협력회사 모임 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서 교부나 반대회신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을 완화해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경쟁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진입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기초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나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선진국에서는 미국과 EU를 필두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미국은 카르텔에 대해 1조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우리 기업들 역시 최근 몇 년 간 반도체, LCD, 국제항공 등의 분야에서의 카르텔 행위로 외국으로부터 총 1조8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국, EU의 경쟁법 집행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제카르텔의 차단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경제위기로 우리는 큰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시련은 정공법으로 극복해야 부작용도 없고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강화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원칙에 따라 경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기문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yeohreum@korea.kr

제언

문제는 금리정책 변경 시기와 속도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의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 경제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선진국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 9월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경제와 함께 급락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금리인하 및 재정확대라는 전통적인 경기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각종 펀드 조성, 일자리 나누기 정책 같은 비전통적인 비상대책들도 다수 동원했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과 함께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진정되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하강세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이후의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많은 불안 요인들이 남아 있어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년간에 걸쳐 축적된 거품이 소멸되는 과정에 있는 다수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의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반기의 경제정책 운용은 비상조치들의 정상화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와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상화라는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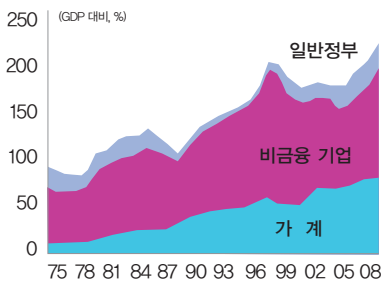
금융시장의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해 10월 이후 취해진 많은 비상조치들은 시장을 진정시키고 기업들의 파산을 억제함으로써 경기급락 및 실업급증을 완충하려 한 당초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비상조치들은 대부분 시장친화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정책들이어서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저해해 경제체질을 악화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됐던 지난해 말 도입됐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채 등 위험채권을 한은의 RP대상 채권으로 편입시켰던 비상조치, 채권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채권시장 안정기금' 등이 이런 정책의 전형적인 예다. 이런 정책들은 점차 축소·폐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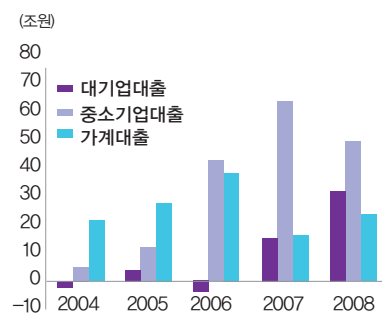
지난해 말 이후 취해진 비상 금융대책들 중에는 광범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대출에 관한 한 거의 전액 만기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까지 확대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한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을 담당해 왔던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확대 등이 그와 같은 예에 해당된다. 이런 대책들은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정책들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장기화될 경우 금융자원의 배분을 왜곡해 정상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통한 신진대사를 마비시켜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는 2006년 이후 경제 전반의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한 가운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확대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에도 외환위기 당시의 극심한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매우 열악한 편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에

〈그림 1〉 부문별 차입금 비율



〈그림 2〉 은행권의 차주별 대출금액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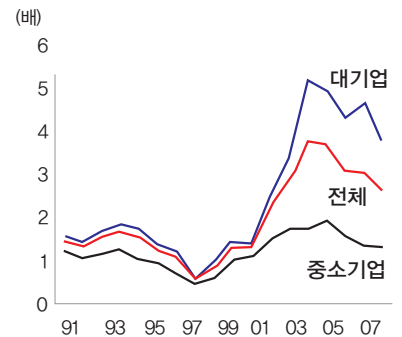


급급한 상황이었다(〈그림 3〉 참조). 경제위기 가능성이 줄어든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차원의 대책들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즉,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시장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촉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계의 부채 증가추세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강남 3구)의 고가주택(6억 원 이상)에만 40%로 설정돼 있는 DTI 비율 규제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대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DTI 비율 상한(여타 신용대출 포함)이 서브프라임 60%, 프라임 40% 내외로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92.4%, 2008년 기준)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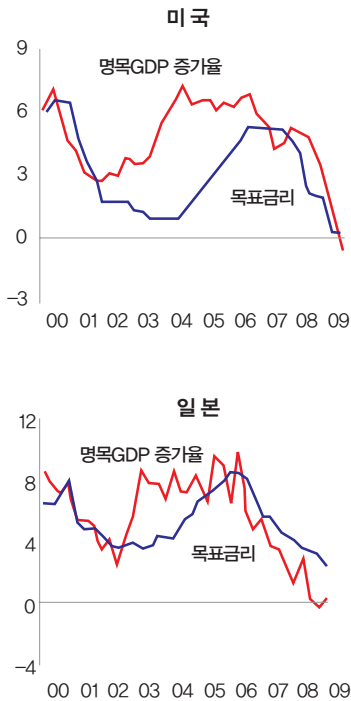
전통적인 경기조절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및 통화정책은 앞서 언급된 임시 비상대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자의적인 정책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상황의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되지 못한다면 그 부작용은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심대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 예로,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 시 취했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결과 발생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증가로 만성적인 적자기조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운용이 매우 경직되고 있다.

〈그림 3〉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통과된 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그림 4〉 미국과 일본의 (명목) 성장률 및 목표 금리



지난해 11월 전광우 당시 금융위원장이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의 긴 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그림 4〉 참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촉발한 것으로 거론되는 1980년대 말 부동산 버블도 이전의 저금리정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일본 중앙은행은 1985년 ‘플라자 협정(편집자 주: 1985년 9월 21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인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가 체결한 환율 조정 협정. 이 협정으로 일본 엔화가 1달러당 240엔에서 120엔으로 절상됐다.)’ 이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물가가 안정돼 목표금리를 크게 인하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경기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상화를 지연시켜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경기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통화정책도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존재하기 어렵다. 문제는 금리정책 변경 시기와 속도다. 최근 우리나라 경기상황이 당장의 금리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향후 통화정책은 2/4분기 이후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 및 자산시장에 발생하고 있는 상방위험(upside risk)의 상대적 크기를 감안하면서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
dccho@kdi.re.kr

여론조사

위기 극복 위한 재정지출 불가피

올 하반기 정부가 가장 힘써야 할 정책과제로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회복 지속'을, 일반 국민들은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꼽았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주요 경제정책 목표 설정을 위해 KDI 경제정보센터에 의뢰해 경제전문가 263명과 일반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와 같이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올 하반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들(복수 응답)은 '경제회복 지속(53.2%, 6.5%)'과 '성장잠재력 확충(11.4%, 20.5%)'을 꼽은 반면, 일반국민들은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42.4%)'을 먼저 꼽고 그 다음으로 '경기회복 노력(35.8%)'을 선택했다.

상반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경제전문가의 대다수(83.7%)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일반국민들도 상반기 경제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정책으로 '금리인하 등을 통한 시중자금 공급 확대' (27.4%)를 꼽는 등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유동성 과잉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전문가의 43.0%가 '전반적으로 유동성 과잉상태'로 진단하고 있으며 '과잉상태이긴 하나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보는 경제전문가도 32.7%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리인상, 유동성 흡수 등 직접적 거시정책' (39.7%) 보다는 '담보대출 규제 등 부문별 미시정책' (48.7%)을 더 선호했다.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해선 대다수의 경제전문가(70.7%)들이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정부의 정책 효과성 미흡' (34.9%)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잘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90.1%), 그 이유로는 '정책의 추진의지 부족' (40.9%)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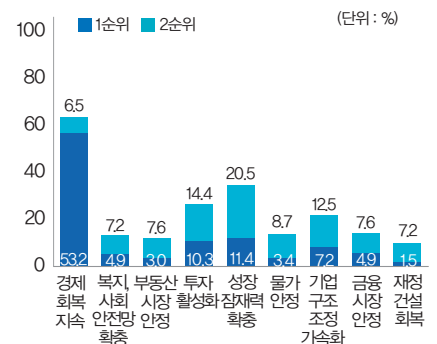
많은 국민들(63.8%)은 6개월 전과 비교해 일자리 문제 등 고용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었다. 중산층과 서민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점을 뒀야 할 사항으로 경제전문가의 67.3%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했고, 일반국민들은 '일자리 창출' (39.4%) 외에 '실업자, 빈곤계층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31.1%)도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해선 경제전문가의 과반수(53.2%)가 '정책기조는 타당하나 규모 및 정책조합 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적절한 조치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36.1%로, 대체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경제전문가의 대다수(80.6%)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당분간의 재정지출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비과세 감면 제도의 축소 및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달성 여부, 지원 대상 중복 여부 등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64.6%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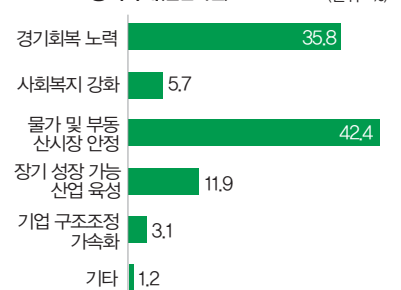
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는 교수 100명, 기업인 75명, 금융투자분석가 49명, 연구원 39명으로 구성됐다. 

정리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그림 1〉 하반기 중점 정책과제(경제전문가, 순위 복수응답)



〈그림 2〉 하반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일반국민)



모르핀 권하는 사회

1930년대 조선에 불어온 백색가루 열풍

한 서의원 원장 우필순은 강화도 일대에서 소문난 명의였다. 어떤 병이건, 아무리 심한 통증이라도 그가 팔뚝에 놓아주는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씻은 듯이 나았다. 통증은 하루나 이틀 안에 어김없이 재발했지만 주사를 맞은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가라앉고 기분도 상쾌해졌다. 우필순이 놓아주는 주사를 한 번 맞본 환자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한 서의원을 찾았다. 우필순은 약의 효험을 시위라도 하듯 자신의 팔뚝에도 수시로 주사바늘을 꽂았다.

우필순이 주사한 만병통치약은 다름 아닌 ‘모루히네’(모르핀)였다. 한서 의원은 병원 간판만 내걸었을 뿐, ‘주사옥’(注射屋)이나 진배 없었다. 결국 우필순은 1935년 12월 의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모르핀에 중독된 돌팔이 의사 탓에 수많은 무구한 환자가 ‘자신귀’(刺信鬼, 모르핀 중독자)로 전락했지만, 정작 우필순은 벌금 100원, 구류 20일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우필순은 유치장으로 면회 온 동료의사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인정이 있거든 속히 한 대만!”

우필순은 모르핀 중독자 치료소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풀려났다.

총독부의 해괴한 아편 정책

아편을 정제한 물질인 모르핀은 아편연(阿片煙)에 비해 값도 싸고 사용하기에도 간편했다. 효능과 해악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총독부는 아편과는 달리 모르핀에 관한 한 한없이 너그렐었다. 아편 밀매업자가 징역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졌음에 반해 모르핀 밀매업자는 구류 며칠이나 백원 남짓한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었다. 아편연 흡연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았지만 모르핀을 주사한 자는 무죄였다. 모르핀 밀매업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잡혀가 백원씩 벌금을 물고 나와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다.

아편과 모르핀에 관한 총독부의 비상식적 차별은 아편이 지

닌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 때문이었다. 일본은 대만과 조선을 병합한 이후 본격적으로 아편 산업에 뛰어들었다. 대만은 아편 연 흡연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반면 조선은 아편연 흡연 풍속 자체가 없었다.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아편 산업을 일으키려 한다면 양귀비 재배지로 대만이 선택되는 것이 정상이었겠지만, 실제로 선택된 곳은 조선이었다. 조선에는 아편연 흡연 풍속이 없어 양귀비를 도난당할 우려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정책적으로 양귀비 재배를 장려한 덕분에 1920년 1톤 정도에 불과하던 조선의 생아편 생산량은 1930년대 후반에는 30톤으로 급증한다. 총독부는 조선산 아편을 전매하여 직영 공장에서 모르핀으로 가공했다. 총독부는 모르핀의 원료인 아편을 보호하기 위해 아편연 흡연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자신이 생산하는 모르핀의 사용은 암암리에 부추긴 것이었다. 1930년 4월 총독부는 모르핀 중독자 등록제를 실시해 모르핀 중독자로 등록하면 ‘치료’ 명목으로 저렴한 가격에 모르핀을 공급하기까지 했다.

총독부의 해괴한 아편 정책 덕분에 아편연 흡연 풍속이 없던 조선에 모르핀 중독자가 급속히 증가했다. 1920년 1만여 명 정



모르핀 중독 치료제 광고 (신동아 1932년 12월호)

《전봉관의 온고지신》에서는 식민 통치로 고통받고 암울했던 시절, 아픔 속에서 태동되던 근대화의 씨앗, 그 안에 숨겨졌던 우리 경제 이야기를 들춰냅니다. 다양한 경제 사건과 인물, 스캔들을 통해 현재 직면한 문제의 뿌리를 찾고 해결의 실마리를 탐색해 봅니다.

도로 추산되던 모르핀 중독자는 1930년 7만여 명으로 늘었다. 가끔씩 모르핀 주사를 맞는 사람은 그보다 10배는 많았다.

모르핀 중독자들은 모르핀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눈을 팔고, 발을 팔고, 딸과 아내까지 팔아넘겼다. 깡통을 차고, 좁쌀부대를 두르고 “한 푼 줍쇼” 동냥을 하다가 그마저 실통치 않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모르핀 값을 벌었다. 모르핀 중독자들은 1원을 구하면 90전은 모르핀을 사고, 10전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아편 정책의 폐해

백색가루의 유혹 앞에는 상하귀천이 따로 없었다. 1921년 이하영 자작의 큰 아들 이규삼이 모르핀을 맞다 검거되었고, 1929년에는 민형식 남작의 아들 민병림이 모르핀 중독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절도를 일삼다 다섯 번째로 감옥에 갔다. 민형식 남작의 여섯 아들은 일찍부터 모르핀에 맛을 들여 육형제 모두 강도, 절도 전과자가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1935년 절도 혐의로 검거된 이한석은 일본 동양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시대일보 기사를 역임한 학사출신 모르핀 중독자였다. 일세를 풍미한 지식인답게 그는 모르핀 값을 벌기 위해 50여 차례에 걸쳐 서점을 돌며 좌익서적만 전문적으로 털었다.

일시적 쾌락을 얻기 위해 모르핀의 유혹에 빠져든 상류층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모르핀 중독자들은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던 서민이었다. 서민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면 병원 대신 모르핀 밀매업자가 운영하는 ‘주사옥’을 찾기 일쑤였다. 서울 시내에만 100여 곳의 ‘주사옥’이 암암리에 성업했다. 1928년에는 장질부사(腸室扶斯, 장티푸스) 치료를 위해 모르

핀 주사를 맞은 환자 90여 명이 폐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연출되기도 했다.

어느 모르핀 중독자에게 다섯 살 난 딸이 있었다. 그 아이는 늘 횃배를 앓고 자주 감기가 들었다. 딸이 앓을 때마다 아편쟁이는 조금씩 주사를 했다. 결국 다섯 살 배기 딸도 모르핀에 중독되었다. 아버지가 주사를 하고 있으면 어린 딸이 그 옆에가 청승맞게 붙어앉아 “아부지 나두 침, 나두 침”하며 졸랐다고 한다.

동아일보 기자 강전식은 서울에 유학 중학교에 다닐 때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감기로 여러 날 지독히 앓았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모르핀을 한 대 맞으면 효험이 있다고 권했다. 그는 친구의 소개로 인사동 어느 ‘주사옥’을 찾아갔다. 주인은 모르핀 주사를 놓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면 으레 아편을 한담니다. 정신이 상쾌

하고 기억이 좋아져서 우등시험을 보게 된대요.”

그러나 그는 아무 효과도 못보고 술 취한 사람처럼 찢찢 매다가 겨우 하숙으로 돌아왔다.

1930년대 조선에서 모르핀은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총독부는 직영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르핀 판매를 위해 모르핀 사용을 허가했고, 비양심적 의사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모르핀을 남용했고, 모르핀 밀매업자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지한 서민들을 유혹했다. 아픈 곳도 많고 근심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시절, 총독부와 비양심적 의사, 밀매업자가 한 목소리로 모르핀을 권했다. [18]



조선일보 1929년 7월 31일자



전봉관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근대문학을 공부하던 중 그 시대 사회·문화의 역동성과 매력을 발견, 근대문화 연구에 뛰어들었다. '30년대 조선을 거닐다(조선일보)', '옛날 잡지를 보러가다(신동아)'를 연재했으며 《황금광시대》, 《경성기담》, 《력키경성》, 《경성자살클럽》 등의 저서가 있다.
junbg@kaist.ac.kr

‘국제 통화전쟁’, 어설픈 대처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뿌리는 이른바 ‘팍스 달러리움’이었다. 미국 달러화가 국제통화시스템의 기축통화로서 압도적 영향력을 지닌 글로벌 경제 질서를 가리킨다.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단한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닉슨 쇼크’ 이후 달러의 위상이 종전보다 다소 흔들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달러는 무역 및 금융거래 결제에 널리 이용되는 기축통화의 만행 자리를 굳게 지켜왔다.

최근 팍스 달러리움이 심각하게 도전받는 듯한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달러 위상 약화의 일차적 책임은 당사자인 미국에 있다. 미국은 그동안 저축은 적게 하고 소비는 많이 하는 ‘배짱이형 경제체질’로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를 늘려 왔다.

모자라는 돈은 외국,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국채를 팔아 메웠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의 신뢰도와 가치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달러 위주의 국제통화체제에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국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안화의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린 것은 물론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6월 26일 공식 보고서를 통해 “특정 주권국가(미국을 지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결함이 많은 만큼 특정국과 결부되지 않은 새 기축통화, 이른바 ‘슈퍼 통화’의 창

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석 달 전인 3월에는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이 “달러 가치가 불안하면 보유국과 발권국에 모두 이롭지 않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세계 공용의 슈퍼통화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다. 겉으로는 SDR을 내세웠지만 내심 위안화를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7월 6일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 간 무역거래 대금 결제가 처음으로 위안화로 이뤄졌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7월 인민은행의 위안화 국제결제 추진계획을 승인한 뒤 1년만이다. 2009년 7월 6일은 중국이 위안 국제화의 첫발을 내디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달러 흔들기에는 다른 나라도 가세하고 있다. 루블화의 국제화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달러



미국 경제구조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달러의 위상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가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초국가적 기축통화 창출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중국,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 4개국’에 속하는 브라질과 인도도 기존 체제 개편에 호의적이다. 유로화 출범의 배경도 ‘달러로부터의 자유’였다.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경제계에는 엔화를 중심으로 달러나 유로에 맞먹는 아시아 공동통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이 이어지던 1998년 잇카와 모토타다 가나가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에서 화제가 된 ‘머니 패전’이란 책에서 지나친 달러 의존이 일본 경제를 망쳤으며 ‘달러로부터의 이탈’을 촉구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중국에서 달러 체제와의 대결을 주장해 베스트셀러가 된 쑹홍빙의 책 제목도 잇카와 교수의 책과 비슷한 ‘화폐 전쟁’이었다. 통화문제가 지닌 민감성을 엿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 무역과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달러의 위상을 감안하면 당장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현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나라들도 당장 전면전에 나설 처지는 못 된다. 중국은 6월말 현재 2조1316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한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데 이 가운데 미국 국채와 달러 현물 등 달러 자산이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미국채 투자에서 막대한 평가손실이 생기고 대미 수출과 고용에도 부담이 커진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외환보유국(1조240억 달러)인 일본 역시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아직 세계가

‘달러의 퇴장’을 받아들이기 태세는 안 돼 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기축통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도 이런 딜레마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구조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달러의 위상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 회장은 “미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으며 달러화는 세계 기축

미국은 그동안 저축은 적게 하고 소비는 많이 하는 ‘배짱이형 경제체질’로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를 늘려 왔다. 모자라는 돈은 외국,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국채를 팔아 메웠다.

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달러에서 이탈해도 유로라는 차선택이 있다”면서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바로 상실하지는 않더라도 독점적 지위는 잃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에서 3위까지의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모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 정치권, 학계, 언론할 것 없이 현재 나타나는 국제통화전쟁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나라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집단들조차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 시각에 머물러 긴장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국은 6월말 현재 2317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가진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이다. 이 가운데 64.6%가 달러 현물이나 미국채 등 달러 자산이고 유로, 엔, 위안 등 나머지 통화는 다 합쳐도 35.4%에 불과하다. 외환보유액 운용을 더 다양화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달러가 흔들리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는 금의 보유량을 늘리고 각종 국제거래에서 달러 이외의 주요 통화 결제도 늘려나가야 한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다팔더라도 국제금융에서 어설픈게 대

처하면 재앙을 맞을 수 있다.

교양 만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이원복 덕성여대 교수는 ‘먼 나라 이웃나라-네덜란드 편’에서 이렇게 썼다. “강대국들 틈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들이 살아남으려면 굶힐 때는 굶히고 자신 있을 때는 당당히 맞서는 작전대결이 필요하다. 이런 방법을 택하려면 상대를 알고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국제통화시스템 급변과 관련해서도 곱씹어볼 만한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



권순환 동아일보 논설위원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경제부기자, 도쿄특파원, 경제부장, 산업부정을 거쳐 현재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shkwon@donga.com

보육비 지원,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지난 6월 25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이미 발표된 내용 중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책을 구체화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명칭 하에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을 6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 복지, 주거 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 여섯 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소액 서민금융재단,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돼 있던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 기구를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으로 통합하고 취급기관도 하반기에 3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했던 저신용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확대했다. 이들은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상당수가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보육·교육, 서민금융, 의료 복지, 주거 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 6대 분야로 구성된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영유아 가구 절반까지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2회 송파구 유아마라톤 대회’에서 어린이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영유아가 가구 절반까지로 대폭 늘렸다. 이를 통해 전액지원 대상이 35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보육비 지급방식도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소비자가 보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7월부터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 11만 명에게도 매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도 2학기부터 이자율을 1~1.5%p 내리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하위 20%에서 30%까지로 2년간 확대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 63만 명과 암환자 67만 명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였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도 완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15%에서 10%로 내린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내린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생계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도 추경예산을 통해 5만 가구 늘렸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한방 물리치료와 5~14세 아동의 치

아홈 매우기도 올해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으로 10년간 150만 세대를 저소득층에 공급하게 될 보금자리 주택은 오는 9월 첫 분양을 하고, 전체적인 공급 물량·지역·시기 등을 사전에 알려 청약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다.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도 크게 늘렸다. 세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우선 공급물량을 5% 더 배정해 분양물량의 최대 10%까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국 민임대주택도 세자녀 이상 가구에 3%에서 10%로 대폭 늘리는 한편, 일반공급 물량 15%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부여해 입주 기회를 크게 확대했다. 세자녀 이상 가구에겐 전기요금도 20% 할인해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시서민들의 밀집 거주 지역에는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낙후된 시설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 200여 곳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기업들 간의 ‘사

전조정협의회’를 시·도에 설치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형 유통기업의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거나 대형 유통점 내에 지역 개별 점포의 입점을 확대하는 등 유통업체 간에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 전국 600여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인턴 취업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50개소에서 72개소로 확대하고 직업훈련과정, 주부인턴, 취업설계사 등을 대폭 늘려 여성의 일자리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크게 겪게 될 서민계층을 위해 2008~2009년중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31조 원 규모를 지원했다.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민생활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정책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사무관
mkh103@mosf.go.kr

20대 기술명장을 기른다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방안

마이스터(meister)는 독일의 독특한 직업교육시스템에서 배출되는 기술명인을 일컫는다. 10여 년간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가며 실제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양성되는데 벽돌, 목수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가 존재하고 상당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아 기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마이스터와 마이스터고는 독일과 동일하게 접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도 조선 1위, 반도체 1위, 자동차 5위 등 생산기술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마이스터고는 바로 이러한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졸업 이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복무, 직장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을 통해 기술명장을 육성하고 산업계의 기술인력 부족문제와 과도한 대학진학의 낭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명확한 성장경로(career path) 확립이다. 그동안 전문계고 졸업생의 경력단절의 1차 요인으로 지적된 군입대 문제는 취업이 확정되면 4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더불어 군입대 중에도 전공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특기병

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취업 후 계속교육을 통한 학위취득 기회 확대를 위해 사내대학*과 계약학과*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필자주: 사내대학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업체 내에 대학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산업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계약에 의해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하는 제도이다.)

특히,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전문계고 졸업자가 3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경우, 수능시험을 거치지 않고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계고 졸업자 재직자 전형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둘째, 그동안 부족했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결정을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마이스터들을 교사로 활용하는 산학겸임교사 제도와

CEO출신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 공모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셋째는 초기기반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이다. 이를 위해 이미 21개 학교 현장에 시설투자 비용으로 약 25억 원을 투자했다. 기숙사와 실습동 정비, 기자재 마련, 교재 개발 등 교육과정의 내실을 위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21개교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올 10월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2010년 개교한다. 전국단위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비율 해당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수업료는 전액 면제되며,

〈제 1, 2차 마이스터고 선정 현황〉

학교명	시도	분야	모집인원	선정시기	비고
수도전기공고	서울	에너지	200	1차	사립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	뉴미디어콘텐츠	120	2차	사립
부산자동차고	부산	자동차	120	1차	공립
부산기계공고	부산	기계	300	2차	국립
경북기계공고	대구	메카트로닉스	300	1차	공립
인천전자공고	인천	전자·통신	160	2차	공립
광주정보고	광주	자동화설비	90	2차	공립
대전동아공고	대전	전자기계산업	200	2차	사립
울산정보통신고	울산	기계·자동화	120	2차	공립
팔달공고	경기	메카트로닉스	160	2차	공립
평택기계공고	경기	자동차·기계	160	2차	공립
원주정보공고	강원	의료기기	160	1차	공립
충북반도체고	충북	반도체장비	100	1차	공립
합덕제철고	충남	철강	120	1차	공립
군산기계공고	전북	조선·기계	180	1차	공립
전북기계공고	전북	산업기계	300	2차	국립
한국항만물류고	전남	항만물류	120	2차	공립
구미전자공고	경북	전자	280	1차	국립
금오공고	경북	모바일제품	200	2차	공립
거제공고	경남	조선	160	1차	공립
삼천포공고	경남	항공·조선	100	2차	공립
계	15개 지역 21개교 (국립3개교, 사립3개교, 공립15개교), 신입생정원: 3,650명				

최신식 기숙사와 현장수준의 실습실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산업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학교들을 보면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면서 우선 취업 후 경력개발을 통하여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학교로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의료기기 등 해당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돼 있다.

반도체장비분야 마이스터고인 충북반도체고는 충북지역 4대 전략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필요 인력양성을 위하여 동부하이텍 등 27개 관련업체와 고용연계 기업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와 클린룸(clean-room)을 기증받는 등 산업체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충북도청과 음성군청으로부터 향후 4년간 9억 원의 지원을 약속받기도 했다.

한편, 삼성중공업과의 협약으로 눈길을 끈 조선분야의 거제공업고는 삼성과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졸업과 동시에 현장근무가 가능한 국제선급용접사(AWS) 자격 취득과정과 조선분야 명장과의 팀티칭, 실습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 거제시는 향후 3년간 마이스터 교육에 8억 4천만 원 지원을 약속했고, 교원을 활용하여 용접분야에 연간 80명씩 지역주민 재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 조선분야의 마이스터고로 군산기계공고 역시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 코어, 군산시로부터 지원을 약

속받았다.

2차 선정에서는 육성분야도 늘어나 뉴미디어 콘텐츠(미림여자정보고), 모바일 산업(금오공고), 항만물류(한국항만물류고) 등 세분화, 다양화된 산업추세를 반영하기도 했다. 항공조선기계분야의 삼천포공고는 인근에 선박조립, 항공기 부품 대단위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SBR, (주)케이엠텍, 삼호조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20여 개 업체와 고용연계기업맞춤형 교육실시를 약정했다. 특히 삼천포공고는 60여 명을 채용 약정한 삼호조선을 포함하여 졸업생 수 100명을 초과하는 105명에 대한 채용보장을 확보함으로써 마이스터고에 대한 산업계의 증대된 관심을 반영했다.

전자, 통신분야의 마이스터고인 인천전자공고는 학교를 이전시켜 청라·송도·영종 산업단지에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고, 삼성서비스센터와 대우일렉트닉스 등 64개 업체와 연계하여 전자통신 품질관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11년까지 50개교를 목표로 하여 2010년 1월 제3차 마이스터 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부처 등과 연계해 농업, 수산업, 상업문화 등 새로운 분야에도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정된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과 학과

개편은 2010년 개교 전까지 각 산업계와 공동 컨설팅을 통해 진행된다. 모든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의 유능한 전문가가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방형 공모를 진행한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올해 안에 11개교가 교장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직업기술 분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대학을 가야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편견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정착은 고졸자가 우리사회에서 성공한 직장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계 현장과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 사이의 기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중추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도한 대학진학 풍토로 직업전문교육을 표방하는 전문계고의 흔들리는 위상을 회복함과 동시에 학벌중심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마이스터고가 전문계고와 선도모델 발전하고 전문기술인이 존경받는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김영곤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장
youngon@mest.go.kr

저작권 보호, 공유하되 ‘창조원천’ 지켜라

저작권법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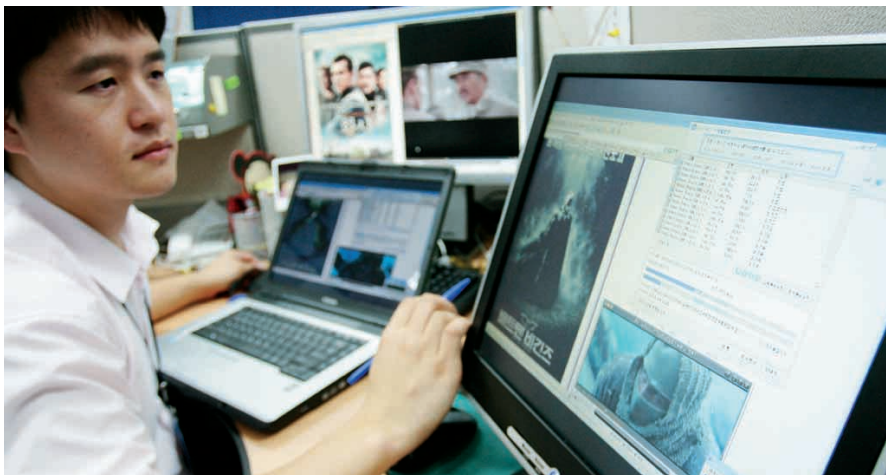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의 핵심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저작권법에 통합, 단일 저작권법 체계를 갖추고 기존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다. 둘째,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불법 해비업로더(영리목적으로 불법파일 등을 대량 올리는 사람)와 상업적 게시판에 대한 행정적 규제 근거의 신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비업로더나 불법적인 상업용 게시판이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법행위가 반복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 안

에 해당 계정 또는 게시판의 정지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목이 별반 없었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외국출판사와 해적판 복제업자의 문제이거나, 일부 복제테이프 판매업자들의 문제로만 여겨졌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시대에는 저작권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갈등이 주요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일부 법무법인이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사례에 대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고소를 제기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최근 다섯 살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른 동영상물이 인터넷에 게재되었다가 권리자의 요청으로 삭제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 한편, 권리자는 온라인상에서의 사소한 업로드 하나로 받게 되는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그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 보호에 필사적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그 자유로운 이용을 놓고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달라지는데 그 한 가운데에 저작권법이 놓여있다.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관계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저작물이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저작물은 저작자가 자신의 시간, 노력,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의 인격까지도 쏟아 부어 만든 창작물이다. 그런데 이런 저작물이 인터넷상에서 마구 유통된 까닭에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면 누가 저작물을 창작하려고 하겠는가? 인터넷에서의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다운로드가 문화콘텐츠산업의 폐쇄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7년 이후 연간 국내 저작권 침해 규모는 2조원을 넘는다. 특히, 음악이나 영상물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70~90%가 불법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물의 불법유통과 사용은 저작자의 재산권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인격권마저도 침해한다는데 우리의 인식이 미쳐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없



지난해 9월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가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 콘텐츠 불법유통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 문화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진국일수록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재능 있는 인재들이 모이게 되며, 이들의 창의력이 다시 문화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권리자의 지구 노력과 정부의 단속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저작권특별경찰제를 도입하였고,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을 24시간 자동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90%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저작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 계정이나 게시판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이를 행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리자가 모든 포털, P2P, 웹하드 등을 일일이 조사하여 사법부를 통한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개정저작권법은 정부가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단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래 <표>는 불법 계정·게시판 정지명령제가 일반국민이 아니라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통해 상업적으로 부당

이익을 얻는 악성 웹하드와 P2P업체 등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도 함께 보장한다.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규정을 두어 장애인이나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서도 배려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국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불법저작물은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합법적인 저작물은 여전히 부담스런 가격이고 그나마 이용가능한 사이트나 시스템 또한 부족하다. 그 결과 불법저작물을 이용하고픈 유혹에 노출되는데 이를 제한하는 저작권법이 거추장스럽고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편안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저작물 공정이용제’가 기대된다. 이는 이용의 목적 및 방법, 저작물의 종류, 이용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통

상적인 이용은 허용하는 것이다. 남의 꽃을 꺾어 따가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가볍게 만져보거나, 향기를 음미하는 정도의 행위는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것이다.

흐르는 강물은 모두가 나눠 마셔야 하듯 문화의 핵심요소인 저작물 또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거대한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상류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가꾸어지고 보호되어야 하듯 문화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창조의 원천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 여기에 저작권법의 존재근거가 있다. 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 기본철학으로 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나눔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윤리와 권리자·이용자가 소극적인 분쟁을 넘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지혜가 절실하다. 발을 지키는 허수아비는 곡식을 따먹는 참새떼는 열심히 쫓아내지만 꿀을 따먹는 벌과 나비는 결코 쫓지 않는다. 저작물 보호와 이용의 조화, 허수아비에게 그 답을 묻는다. **김진곤**

<저작권 보호체계>

주체	목적	보호법익	대상	법적수단	성격
권리자	저작권리 보호	개인적 법익	일반이용자 불법유통업자	민사소송 형사고발	친고제
정 부	유통질서 유지	사회적 법익	상습 불법유통업자	형사기소 계정·게시판 규제	비친고제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jabez65@korea.kr

식별번호 누르면 10개 정보 당장 확인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

1986년 유럽, 2001년 일본, 2003년 미국을 비롯 25개국 약 19만 두의 소에서 BSE(소해면상뇌증)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BSE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발생하였을 때 국내 쇠고기 소비가 급감한 적이 있다.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도가 도입됐다. 향후 육류의 국가 간 거래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도 예상돼 향후 이력제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중요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고절차, 귀표의 부착, 쇠고기 거래실적 및 이력추적시스템 운영 등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했다. 시범기간 동안 지역축협 등을 위탁기관으

로 지정해 농가로부터 소의 출생, 이동 등 신고를 접수받아 귀표부착 및 전산입력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를 준비했고, 도축·식육포장처리·식육판매업 등 유통단계는 시·도에서 연계사업장을 지정하거나 개별적으로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2007년 12월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8년 12월부터 사육단계 이력제를 본격 시행하였고, 도축·포장처리·판매 등 유통단계 이력제 시행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전국적인 시범실시 후 지난 6월 22일부터 쇠고기 유통단계(도축-가공-판매)까지 전 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는 사육종인 모든 소에 개

체식별번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이력정보도 제공된다. 제도를 운영하면 소의 혈통, 사양관리 등의 정보를 연차적으로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선진국의 이력제는 쇠고기뿐 만 아니라 다른 식품까지 확대되고 있어 그 시행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 사육·도축 및 쇠고기 가공·판매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사육단계 이력관리를 살펴보면 소 사육 농가는 소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샀을 경우 시·군별로 지정된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탁기관은 농가에서 출생신고된 소의 귀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 이력추적시스템에 농가명, 소 사육지, 소의 종류, 성별, 출생일 등의 정보를 전산 입력한다. 소의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와 도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농가나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사용 중인 소비자들

가축시장의 상인들은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을 위해 출하할 때 휴대폰을 이용해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소가 전산등록되었는지, 사육지 이동경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도축단계에서 도축장 경영주는 소의 귀 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된 소만 도축하고 도축검사 신청인, 도축목적, 소의 종류, 성별, 연령 등 도축처리결과를 이력추적시스템에 신고한다. 이때 도축된 모든 소에게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보관용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보관한다. 등급판정결과가 전산입력된 소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지육에 부착하여 출고된다.

포장처리단계의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는 입고된 지육 또는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해 포장육을 만들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다시 쇠고기 포장육에 부착한다. 업소에서는 쇠고기 포장처리실적과 판매·반출실적을 기록(또는 전산신고)하고 2년간 관리하게 되므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판매단계의 경우 쇠고기 판매장에서는 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며 거래내역을 기록해 관리한다. 소비자는 판매되는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여 쇠고기의 종류, 원산지, 등급, 사육농가 등 10개의 정



정읍에서는 단풍미소 한우를 기른다.

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휴대폰으로 확인하거나, 인터넷 '이력시스템(www.mtrace.go.kr)'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에 비치된 터치스크린 등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의 출생 등 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 기록관리 등 일련의 이력관리를 위반한 사육농가, 쇠고기 유통관계 영업자 등에게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의 사육에서 쇠고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DNA동일성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의 원활한수행을 위해 이력시스템 이용방법, 제

도 전반에 걸친 질의 응답 및 민원해소, 소 개체식별대장 관리 등을 위해 농림수산물품부에서는 이력지원실(문의: 1577-2633)을 운영한다. 앞으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제도의 내용과 효과 소개, 소비자 정보 확인방법 등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력제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시·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도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수
농림수산물품부 동물방역과장
sangsoo@korea.kr

117개 사업장에서 이산화질소 38% 줄여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

수도권의 대기질은 OECD 국가 주요 도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몇 년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오염도는 비수도권에 비해서 1.3~1.4배 높은 수준이다. 아래 그림 1은 올 6월중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PM10, $\mu\text{g}/\text{m}^3$)와 과거 스모그로 악명 높았던 영국 런던의 오염도를 비교해 본 것으로, 서울의 오염도가 런던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수도권의 면적(km^2)당 인구와 자동차 수는 각각 2,035명과 654대로 미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LA 지역(SC AQMD)보다도 높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농도규제 위주의 사후적

인 관리방식으로는 수도권 대기개선의 한계가 있어 환경부는 2003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맑은날 남산에서 인천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정 확보를 목표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2005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에는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4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됐으며, 이를 2014년까지 2001년 대비 38.7%에서 53%까지 삭감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자체와 함께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보급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할당하고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역총량제와 마찬가지로, 참여사업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일부 완화와 부과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으면서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을 연도별로 줄여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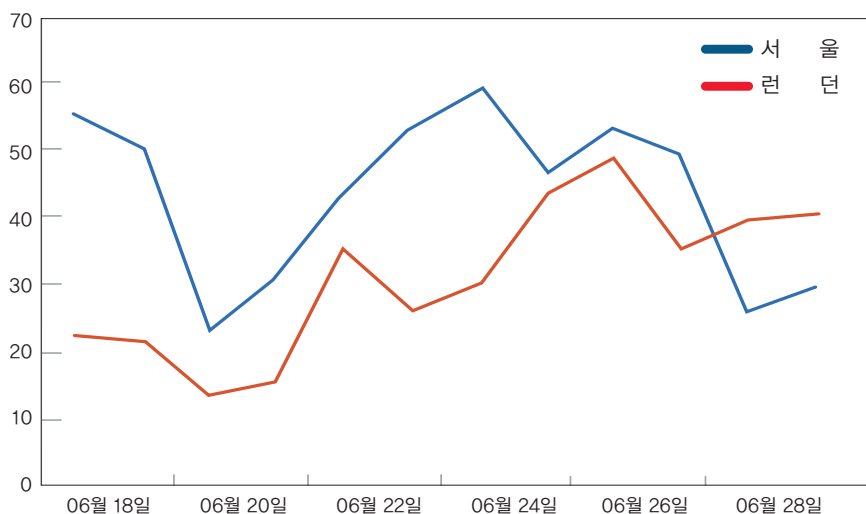
현재 수도권 내 질소산화물(30톤) 및 황산화물(20톤) 배출량 초과 사업장 117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대상 사업장의 이산화질소와 황산화물 배출량이 2006년 대비 2008년 각각 38%, 3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장의 효율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여유분의 배출권을 확보한 사업장은 이를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배출권이 부족한 사업장은 시설 투자비와 거래 금액을 비교해 배출량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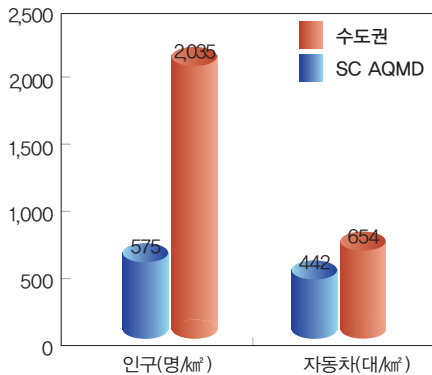
배출권 거래는 첫해인 2008년에 총 18건이 이루어졌으며, 거래량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각각 894톤, 116톤에 이른다. 거래량의 상당량이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형성이 초기단계임에 따라 평균단가가 29원/kg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전망은 밝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REC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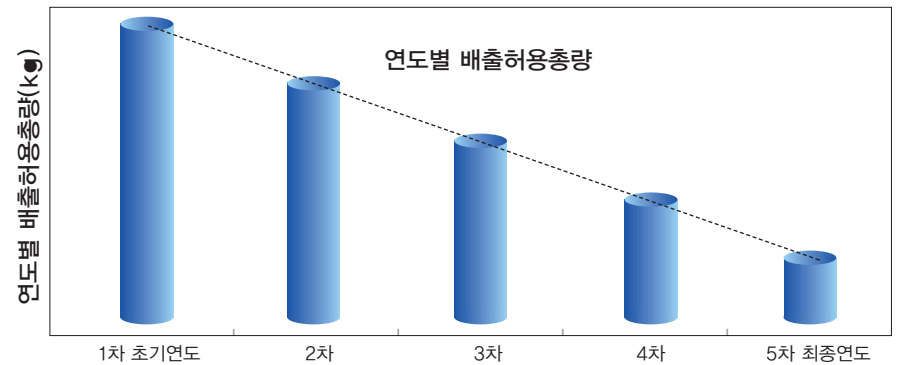
〈그림 1 - 미세먼지 오염도 비교〉



〈그림 2 - 인구 및 자동차 부하량〉



〈그림 3 - 배출허용량〉



IM) 시행 초기였던 1994년에는 거래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2006년에 이르러 총 622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금액 또한 7천 4백만 달러에 달하는 등 거래가 활성화됐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각광받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것 외에도 최근의 가장 큰 이슈인 기후변화문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더 보편적으로 알려진 배출권 거래 대상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이다.

기후변화협약이 1994년 발효되고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감축목표를 담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EU는 200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시행 첫 해인 2002년에 866

개의 기업과 35개의 중개인이 거래에 참여했으며, 일본에서는 2006년 ‘자주참가형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여 추진 중이다.

대부분이 화석연료 연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도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의 경험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확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동일 프레임워크에서 병행하는 배출권거래 법안이 2003년에 발효됐고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는 2004년 9월, 이산화질소는 2005년 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통합운영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중 발표예정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편익과 함께 배출권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황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물질과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거래를 병행 운영하는 등 앞서 시행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 삼아 활성화의 길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노희경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총괄과장
louie@korea.kr

이젠 보안의식을 업그레이드할 때!

7.7 DDoS 공격과 정보보호

지난달 7일 국내 정부·금융기관, 언론사, 포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DoS)’은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내 22개 주요 사이트와 미국 14개 사이트의 접속 지연 또는 일부 서비스 장애를 가져왔다.

이번 DDoS 공격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적인 해커에 의해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공격이었다는 점이다. 주요 사이트들이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 일정한 간격으로 공격을 받았으며, 마지막 3차 공격에서는 감염된 일부 PC의 데이터 파괴까지 감행됐다.

사건 발생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 정보보호진흥원(KISA), 백신업체 등은 물론 유관 정부기관들과 공조해 신속히 대응했다. 단시간 내에 DDoS 공격에 활용된 악성코드를 채집·분석해 대국민 정보발령, 보도자료 배포, 언론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DDoS 공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확산을 최소화했다.

현재는 해당 사이트들의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화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DDoS 공격의 원인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미 지난 2003년 1월 25일 인터넷 대란을 경험했던 정부는 그간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지



국내 주요기관 전산망을 교란한 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사들이 7월 10일 오후 서울 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에서 입수한 하드드라이브를 살펴보고 있다.

원센터’를 설립해 인터넷 트래픽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편,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DDoS 공격은 현재의 대응시스템으로는 새로운 기법의 침해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제까지와는 차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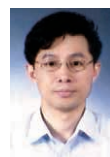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정착, 전문화된 최신 기법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탐지 및 원인분석 시스템 구축, 비상시 민간 기관의 신속한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 마련, 정보보호 관련 투자 활성화, 이용자들의 보안의식 제고 등 모든 분야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번 DDoS 공격의 과제로 남겨졌다. 정부는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범정부적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보안의식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DDoS 공격에 동원된 PC들은 평소 보안패치나 백신 업데이트를 소홀히 한 결과 모르는 사이에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됐다.

인터넷상에서의 보안은 고가의 장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완벽한 방어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정보보호를 생활화할 때만이 진정한 인터넷 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인터넷 보안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부 또한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박철순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
poempark@kcc.go.kr



워크넷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어려운 취업 문제, 워크넷을 만나면 빠르고 쉽게 해결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www.work.go.kr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지만(08년 84%) 평생학습참여율(07년 29.8%)은 OECD 주요국(08년 핀란드 64.8%, 영국 53.7%, 미국 48.1%)에 비해 훨씬 낮다. 평생교육은 말 그대로 평생에 걸친 교육이다.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학교에서 사회 전부로의 확대이다. 우리의 평생교육은 지난해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으로 한 단계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평생학습계좌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개인이 받은 교육이 마일리지로 쌓여 취업과 승진의 기회로 활용되는 제도다. 평생교육의 역사와 발전과정, 현재의 모습, 미래의 패러다임을 『나라경제』가 짚어본다.



정책 그 후 >> 평생학습정책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간편한 방법

평생교육의 이상향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법과 제도,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평생교육정책을 구현한다. 시대마다 적절한 평생교육 정책사업과 제도가 운영돼 왔다.

1980년대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조항을 명시해, 평생교육 진흥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1990년대에는 신교육체제의 비전으로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 건설을 제시했다. 2000년 이후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함께 다양한 평생교육정책이 추진됐다. 학점은행제도 참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2001년 시작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시·군·구 지자체를 단위로 평생학습 전담기구 및 인력이 확보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평생교육이 활성화됐다. 제1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02년~2006년)과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08년~2012년)은 국가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의 평생교육정책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2008년 2월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한국 평생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예고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책무를 강화하고 평생학습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강화해 학습의욕을 고취하며, 기초교육 기회와 고등교육 수준으로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기존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독학학위검정원을 통합한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추진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다.

지난 10년간의 평생교육정책 성과는 교육행정뿐 아니라 일반 행정도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 기반확충,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 취약계층에게 문해교육 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통합

실현, 자격기본법 전면개정 및 평생학습 결과 표준화 사업과 교육 계좌제 사업 실시 등을 통한 평생학습 결과의 체계적 관리, 평생학습 축제 개최, 평생학습 대상 실시 등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확산, 대학의 시간제 등록제나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지원, 성인중심의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주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학점은행제 학습자 지원, 군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 많은 평생교육 정책 사업들이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책을 돌아보면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한시적인 프로그램 및 사업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미진했다. 또한 그간의 평생교육 정책은 평생교육이 전 생애를 거쳐 삶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타부처 및 일반 지자체와의 연계가 미온적이었다. 그간의 평생교육정책이 단위 사업별로 추진돼 전 생애 걸친 순환학습 모형 제시도 부족했다. 지난 10여 년 간 평생교육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있었음에도 평생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일례로 2007년 교육부의 직접적인 평생교육예산(담당부서 예산)은 166억 원으로 교육부 전체 예산(310,447억 원)의 0.05%에 불과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 취업형태별 평생학습 참여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평생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남원



백은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장

esbaik@nile.or.kr

딩동! 주문하신 강좌 배달 왔습니다

학 교교육 중심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평생 고용 가능성이라는 말이 대신 들어왔다. 전 생애 걸친 체계적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의 접근법도 새로워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정책과 이동호 과장을 만나 평생교육의 성과와 정책 방향을 들어보았다. 평생학습이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다. 무엇을 누구에게



이동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정책과 과장

어떻게 학습시킨다는 것인가. 현재 교과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평생학습이라는 정의가 법에 명시돼 있지만 포괄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포괄적이다(웃음). 평생교육에는 교육 뿐 아니라 복지, 노동의 개념이 총망라돼 있다. 저소득층·고령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복지에 가깝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은 노동에 더 가깝다. 그밖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위탁기관(각 지자체 복지관, 대학의 평생교육원, 민간 학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실시한다. 우리 과에서는 평생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 축제 등을 기획했다. 또한 현장에서 교육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 내의 평생교육원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 추진에 어려운 점은 없나?

다른 부처,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부족이란 어려움이 가장 크다. 평생교육 자체가 특별한 수혜계층이 없다. 전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다 수혜자다. 그러니 교육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은 성과가 단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취업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들이라면 취업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겠지만 취미, 인문 교양 등 자아실현을 목적

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 예산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다. 사회적자본 확충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면 한다.

교육 현장에도 자주 가나? 우수 지자체 사례가 있다면?

교실에서 듣는 강의도 배달이 된다. 대전시 대덕구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에 강사를 파견하는 일이 있었다. 5명 이상의 주민이 강좌 개설을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하루에도 수백 통씩 전화가 걸려온다.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특색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또한 서울대에서는 금융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천체물리학 강의를 진행했다. 대학교 하면 그 학교 학생들에게만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생각해 왔지만 앞으로는 각 대학들이 지역주민 강화를 위해 학교공간을 개방하게 될 것이다. 물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학점 인증 기준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정해 평생교육 학위가 정규학위 못지않게 당당하게 인정받았으면 한다.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수업 평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평생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공부할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으면 한다. [문]

안성경 나라경제 기자

대학 안 가도 학위 얻는다

반전한 나를 찾고 싶은가? 그렇다면 주목하라.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 가까운 곳에서 배움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8년~2012년)이 추진됐고, '평생학습계좌' 도입이 국정의 핵심과제로 채택됐다. 또한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서는 평생교육을 더욱 구체화시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을 포함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 정의했다. 즉 평생교육은 정규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정규 고등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습자는 학점과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학점은행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받는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 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지난해 10월 현재 누적 학습자수는 384,881명으로 1999년도 등록자수의 약 30배에 달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한 학습자는 1999년부터 작년까지 총 122,081명이며, 전문학사가 38,974명, 학사가 82,190명에 이른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상당수가 편입 혹은 진학해 새로운 배움을 추구하고 있다.

학습계좌제

학습계좌제는 학위 취득이 목적이 아니다. 개인이 평생교육기관에서 들은 강의를 '온라인 학습계좌'로 등록하면,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해준다. 즉 자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는 추적관리 시스템이다. 이제

도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개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고, 올해 5개 기초지자체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독학학위제도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학교가 부족하다면? 무작정 학교를 지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독학학위제도로 말 그대로 혼자 공부한 후 학습한 결과를 시험을 통해 검증해 학위를 수여한다. 이 제도는 열린 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특히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 시험은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학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현재 전공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컴퓨터과학, 가정학, 간호학 등 9개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94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었다가 99년 이후 점차 늘고 있다. 

〈한국 평생교육 정책의 발전 과정〉

1980년대

- 헌법에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미 조항 명시
- 사회교육법 제정, 평생교육의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활성화 및 개방대학의 확충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 개설 운영

1990년대

- 신 교육체제의 비전으로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 제시
- 열린 고등교육체계인 학점은행제 실시
- 1999년 8월 평생교육법 제정
- 2000년 평생교육 3대 전담기구 설치

2000년대~현재

- 평생학습의 대중화를 통한 기반구축
- 2001년 평생학습도시사업추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가속화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급증 등 접근성 향상
-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활성화
- 평생학습 진흥 종합계획 수립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구리, 자기개발에 올인하는 도시

여호현 구리시청 평생학습센터 팀장



구리시는 지난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에서는 유일한 평생학습도시로서 기존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역으로 이용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오는 10월에는 76개 평생학습도시를 대표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열게 돼 준비가 한창이다.

구리시 평생학습사업,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그동안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면 모든 교육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이란 끝이 없다는 전·현직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여기에 구리시는 평생학습을 통한 취업과 창업을 위해 인터넷 소호, 쇼핑몰 창업, 피부미용관리사, 미술심리상담사,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자격 취득과정을 내세워 평생교육을 시작했다. 물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각종 여가, 건강, 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주민들 삶이 향상되고 문화적 소양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다.

평생학습도시는 어떻게 선정되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면 평생학습도시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실사를 통해 확정한다. 2005년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더욱 자랑스롭다. 경기북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교육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대학교 포천에 한 곳 뿐이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이용한 교육을 시작하게 됐다.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같은 곳에서 공부하게 돼 반응이 참 좋다.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모사업을 통해 연간 1억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여기에 시비(市費)를 더해 운영한다.

교육은 무료인가? 누구에게 얼마 동안 실시하나?

공짜라고 하니 아무래도 교육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

더라. 교재비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내도록 했더니 참여율이 더 좋아졌다. 물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관내 부대나 다문화가정 등은 무료로 교육한다. 대상은 구리시민 누구나 가능하고 성별, 연령제한이 없다. 사회복지관, 수련관 등의 지역내 기관에서 교육하기도 하고, 주민자치센터나 초·중·고교에서도 교육한다. 교육마다 기간이 다른데 짧게는 2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다양하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교과부를 통해 각 학교마다 평생학습교실 담당자가 배정돼 있긴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없다. 별도의 수당을 줄 수 없다면 약간의 인센티브라도 줘서 평생학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개별 시청에서 담당교사들을 모아 격려하는 수준이다. 또 구리시의 경우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평생교육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인프라를 갖추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오는 10월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열린다는데 어떤 행사인가?

앞서 말한 대로 평생학습은 삶이 끝날 때까지의 교육을 지향한다. 10월 9~12일까지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행복의 반올림, 희망의 어울림 2009 구리'라는 주제와 '미래를 여는 한강의 학습기적'을 부제로 했다. 직접 교육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리시민 한자왕 선발대회 같은 참여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축제 유치에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전국 규모의 축제이며, 교육을 매개로 한 축제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 200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축제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시민들의 정서가 풍부해지고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구리만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평생학습으로 직업 얻었죠

김승화 구리시 교문2동 주민센터 강사



구리시 교문2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해 제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프로그램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 수상은 '평생 교육의 실천, 그 중심에 교문2동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라 더욱 뜻 깊다. 김승화 씨는 이곳에서 받은 교육을 다시 주민들과 나누고 싶어 강사가 됐다.

평생학습 교육은 어떻게 알게 됐나?

사실 평생학습을 알게 된 것은 독일에서 살면서다. 1981년부터 1995년까지 그곳에서 공부하고 연방연구소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 말도 글도 낯설던 독일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게 그곳의 평생교육 덕분이었다. 한국에 와서도 평생학습이 있다기에 관심이 있어 공고를 보고 신청했다.

어떤 교육을 받았나?

처음에는 영어를 들었고, 이후 스포츠댄스, 컴퓨터 등의 여러 교양 수업도 들었다.

여러 강의를 들으신 이유가 있나?

우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값이 저렴하고,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 또 지역 사회 주민들이 서로 알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생긴다.

강의를 들은 후 지금은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그렇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가는데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봤다. 손녀가 “할머니 저건 뭐야?”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할머니가 “눈이 나빠서 안 보여”라고 답하시더라. 그랬더니 이번엔 손녀가 아파트 벽면에 적힌 커다란 글자를 가리키며 “저건 뭐야?” 하고 또 물었다. 할머니는 또 “눈이 나빠서 안 보여”라고 했다. 손녀가 놀이터에 노는 걸 보고 살짝 가서 물었다. 글을 모르시냐고. 그랬더니 부끄러워하면서 그렇다고 하셨다. 의외로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 많더라. 바로 문해강사 양성과정을 신청했다. 과정을 마치고는 지난해 1월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해강사로 일하고 있다. 문해강사라는 것은 문자를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사람이다. 요즘은 기초적인 영어를 모르면 간판 읽기도 힘들다. 우리 행복교실(문해반) 어르신 스무 명은 59세부터 88세까지 연령도 다양하다. 이 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다. 내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평생교육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배운 것을 나누는 게 쉽지만은 않은 텐데 다른 일은 안하시나? 컨설팅 일을 하는데 비정기적이다. 강의를 듣기만 하다가 막상 가르치려니 쉽지 않아 관련된 수업도 듣고 책도 많이 읽는다. 보통의 강사는 강의료가 있어 이걸로 생활이 되니 취업이 된 셈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나는 강의료 안 받고 한다. 하하. 혹 받는 경우에도 수업 교재 사드리고 전시회 관람 같은 기회를 만든다.

대단하시다. 개선됐으면 했던 점은 무엇인가?

교육생으로 아쉬웠던 것은 수강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어떤 건 너무 쉽고, 또 어떤 건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구리에 만도 8개동이 있으니 동별로 단계별, 수준별 수업을 나눠 실시하면 더 효율적일 거다. 교육의 연속성도 부족하다. 한자 교육 2개월, 그 다음에는 교육이 없어져서 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더라. 하나 더, 평생교육이란 것이 졸업이 없으니 까수업을 들은 사람이 반복해서 또 듣는다. 그런데 인원제한이 있으니 새로 듣고 싶은 사람은 못들을 수도 있다. 신입생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미달이 되면 기존 학생에게 기회를 주거나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신청에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나야말로 평생교육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통역사가 되고 싶어 공부하고 있다. 목민아카데미와 이화여성아카데미 강좌가 도움이 된다. 더 열심히 공부해 구리시에 도움 되는 사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평생학습센터, 쇼핑센터 · 도서관에도 있다

독일 : 교육상품권 · 계속교육대출에 교육상담 핫라인까지

독일은 전국 2만5천 개 시설에서 40만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교육을 시행 중이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400억 ~500억 유로. 산업체가 52.1%, 연방노동청 20%, 공적자금 6.5%, 개인이 21.4%를 각각 부담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30유로 이상의 계속교육과정 비용을 개인이 50% 부담하면 국가가 1년에 154유로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교육상품권(Pramiengutschein) 제도를 시작했다. 연 수익이 17,900유로 이하인 국민은 전국 약 600여 상담소에서 간단한 심사로 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적립금을 계속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속교육적금(Weiterbildungssparen) 제도도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다. 만기이자 보너스를 그대로 받으면서 기존 적립액을 교육비로 쓸 수 있고 개인신용검사 없이도 적립액만큼 낮은 이율로 빌려준다.

계속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상담 핫라인도 시범 운영 중이다. 이곳을 통하면 지역 교육상담기관이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지금은 시범 지역에서 2년간 시행중이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영국 : 전국 690개 학습센터에서 원스톱 교육

영국은 2000년 10월, 새로운 형태의 학습기관으로 산업대학(University of Industry : Ufi)을 설립했다. Ufi의 성인학습 서비스는 'Learndirect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 2007년 약 250만 명이 680만 강좌를 수강했고, 2008년엔 전국에 690개의 'Learndirect 학습센터'가 설치됐다. 학습자들은 집 가까운 곳에서 정보 서비스나 학습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학습센터가 회사내, 도서관, 계속교육대학은 물론이고 쇼핑센터, 축구클럽과 같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다는 것이다. 학습 형태는 온라인, 전일제, 정시제, 지역학습센터에서 학습, CD-Rom 학습 패키지를 집으로 배달, 칼리지에서의 야간 수업, 쌍방향 TV 프로그램

램 방송, 라디오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 : 국민 23%가 자기개발 위해 교육 받는다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종합적인 국가평생교육정책은 없다. 대부분의 성인교육이 주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실행된다. 성인교육프로그램은 크게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직업관련 프로그램(Work-related Courses), 개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Personal Development Courses)으로 구분된다.

ESL은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이민자, 외국인들에게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업관련 프로그램에는 도제훈련, 직업능력개발, 자격인증 등이 있는데, 각 교육기관은 서로 협조해 공동으로 학습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칼리지 간 협동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이 전문학과와 관련한 도제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티칼리지와 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이다. 주로 자격증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코스로 구성된다.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 국민은 23%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내용은 건강, 피트니스, 오락, 취미, 시민권리, 정치, 여행, 문화, 종교, 성경 등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한편 노인교육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성인교육서비스, 지역사회기관 등에서 제공하는데, 학점과정과 비학점 과정으로 나뉜다. 노인들은 정부와 기업의 취업 · 직업훈련비 환급 · 면제 정책에 따라 학력을 취득하거나 전문자격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은 512개 이상, 프로그램도 1,070여 가지나 된다.²⁴⁾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평생교육은 가치를 전달하는 이어달리기

사회적자본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관계구조,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규범, 신뢰 등을 의미한다. 즉 미시적 수준의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며, 다른 자산의 부족을 극복하는데 사회적 관계가 사용될 수 있다. 사회적자본은 학습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학습은 개인과 집단이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데, 사회적자본은 학습과정의 촉진자 역할로 교육의 궁극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사회적자본의 형성 요인과 효과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형식·비형식·무형식 학습기회의 제공이 사회적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적 등 교육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연구들은 학교교육 뿐 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사회적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자본과 평생교육은 상호 역동적인 인지과정이다. 즉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특정 능력을 습득한다. 이는 학습문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규범의 역할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적자본은 인적자본과 같이 이를 소유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재적 속성을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평생교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공동체의 재산으로써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을 유도한다. 이런 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교사, 동료, 기타 인적·물적 환경 등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인과 집단의 성장을 위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그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 태도, 가치를 형성해 가는 다차원적 활동인 평생교육은 사회적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위한 중요한 통로다.

최근 평생교육에서의 사회적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이 사회적자본을 형성하는 근원으로서 주목을 받게 된 데 기인한다.

지역공동체 내 사람들 간의 관계 구조 속에 내재돼 있는 학습자원으로써의 사회적자본을 통해 시민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사회적자본과 관련해 시민참여교육을 평생교육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평생학습사회 건설에 있어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실제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평생교육이 담당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시민참여교육 역시 전통적인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질적 기여를 명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와 같은 정치적 참여, 다양한 지역사회 및 단체 활동, 자원봉사 활동,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가족·이웃과의 교류 등 평생교육적 접근이 모두 학습의 자원이 되며, 사회적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최근 평생교육 분야에서 주된 관심이 됐던 지역 기반적 학습공동체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참여와 연대, 통합의 기능에 관심을 가지며, 집단적 시민참여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자본 형성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자본이 형성된 공동체에서 각 개인은 다른 구성원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공동체적 이해와 정보의 효과적인 공유, 즉 관계의 질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력적 관계성(supportive relationship)은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에 의해 보다 효과적인 습득이 가능하다.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인재교육연구본부 본부장
hyr@kedi.re.kr

유희, 절반의 가능성

다음 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알래스카 남동부에 사는 틀링기트족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그 족으로 태어난다고 믿는다. 1949년 윌리엄 조오지라는 60세 틀링기트 인디언 어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기가 죽으면 그들의 아들로 태어날 거라며 자기의 금시계를 맡겼다.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점들을 확인시켜주면서 같은 신체부위에 점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인 줄 알라고 말하고 배를 타고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과연 9개월 후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의 할아버지와 같은 부위에 점이 있었다. 자라면서 아이의 행동거지는 할아버지와 똑같았고, 삼촌들을 ‘아들’이라고 하고, 대고모를 ‘누이’라고 불렀다. 5살쯤 되었을 때 아이는 어머니의 보석함에서 금시계를 꺼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점잖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실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심하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버지니아 의과대학 정신신경과의 아이언 스티븐슨(Ian Stevenson) 교수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직접 관찰한 유희를 ‘암시하는(suggestive)’ 사례 중 하나다. 1966년 출판된 그의 저서에는 이보다 더 극적인 얘기들이 많다. 저명한 학자의 권위에 편승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실제로 서구의 심리학자들이나 신경계통 연구자들 중에는 유희설을 진지한 태도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약간 달라 유희를 ‘사실적으로’ 다루면 사이비 과학쯤으로 매도당하기 쉽다. 심지어 일부 불교학자나 승려들도 유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유희와 같은 ‘미신적인’ 교리가 불교철학을 촌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해 선지 유희설에 대해서 일종의 증오심까지 느끼는 것 같다.

물론 유희를 암시하는 사례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만으로 유희가 입증되는 건 아니고, 유희 여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방도도 아

직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유희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에 맞고 사회적 통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불에 타거나 썩는 것을 분명히 보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살아남아서 다른 육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올 법한 허구라는 것이다. 유희에 대한 관점이 과학과 비과학을 가르는 지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희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다면 과학의 이름으로 유희가 허구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유희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에 속한다. 알 수 없는 일은 무턱대고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유보해두는 것이 양식 있는 태도일 것이다. 뚜렷한 근거도 없는 선입견이나 ‘사람들’에 의해 왜곡됐을 수



잉카인들은 비쿠나(안데스 산맥 고지대에 서식하는 라마의 일종)를 죽음에서 환생하는 힘을 가진 신성한 동물로 숭배했다. 차쿰(털 깎기) 의식도 비쿠나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 있는 교리에 의지해서 윤회를 부정하는 독단이야말로 과학의 적이다. 윤회를 믿는 것도 믿음이요,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인들이 윤회를 믿는 비율이 50~70% 정도라는 통계는 의미심장하다. 윤회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바에야 그 진위를 50대 50으로 남겨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발밑의 일도 어찌될지 모르는 판에 윤회는 너무나 먼 세상 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50%의 가능성이란 만만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겸손하게 인정하듯이 우리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날’ 이 내일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윤회하는 존재라면 죽어도 죽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그것은 그리 반가운 일은 못 된다. 인도의 해탈사상도 윤회를 벗어나야 할 괴로움이고 질곡으로 본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無)로 돌아가지 않고 삶이 연속된다는 것은 내가 나로부터 영원히 달아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없이 갑갑한 것일 수가 있다. 물론 항상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회가 희망의 징표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윤회는 (50%의 가능성 안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존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의 경우 에드가 케이시(Edgar Cayce, 1877~1945)라는 “잠자는 예언자”가 등장한 이래, 1950년대를 기점으로 환생설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 여파로 자기의 재산을 다음에 환생할 자기에 유산으로 남긴다는 웃지 못할 아이디어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에드가 케이시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기독교의 장로로서 우연히 자신에게 내재된 능력을 알고 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전생을 읽어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종의 영능력자이다. 가수면 상태에서 말한 정보를 리딩(reading)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의식의 영역에 기록된 내용을 ‘읽은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천 건에 달하는 리딩은 문자로 기록되어 관심있는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그의 리딩이 유의미한 것은 거기에서 종교와 문화권을 넘나드는 보편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딩에서 추론된 윤회의 매커니즘은 이러하다.

공정하게 말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윤회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에 속한다. 알 수 없는 일은 무턱대고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유보해 두는 것이 양식있는 태도일 것이다.

회의 매커니즘은 이러하다.

한 ‘존재’는 무수한 생을 반복해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데, 그의 무의식에는 오랜 생에 걸친 경험과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새로 태어난 존재는 그것을 기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깨어난 뒤 영향을 받는 것과 같다. 과거 생으로부터 축적된 무의식은 현재의 성격과 재능, 그리고 건강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리딩의 목적 중의 하나는 의외하는 사람의 전생을 ‘읽어서’ 현재의 심리적 문제와 육체적 질병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전생과 현생의 연결 고리이다. 수천 건의 리딩에 따르면 모두들 하나같이 파란만장한 전생을 거쳐왔다. 우아했던 귀족이 다음 생에서 거지나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전생에 문맹이었던 하녀가 현생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예도 있는데, 에드가 케이시의 해석에 따르면 환생하는 존재의 무의식이 영적 성장을 위해 다음 생을 임의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마치 배우가 다양한 배역을 연기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데, 개인의 삶을 한 사람의 배우와 여러 배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또한 영적 진보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을 돕는 행위라고 했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남의 전생을 읽어준 사람의 결론이다. 그것은 우리가 세 살 적부터 들어온 말이기도 하다. 진리가 멀리 있지 않음을 알겠다. 



서정형 철학자

서울대 철학과,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과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국제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인간과 우주의 원리, 종교와 사회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필력의 소유자로 지인들과 함께 일상의 사유와 정보를 나누는 사이버 공간, ‘사람다کم(www.sahram.com)’을 운영하고 있다. naruppe@empal.com

저혈압과 고혈압

‘닥터 뎀(Dr. Doom)’이라 알려질 정도로 비관론자이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는 소식에 주식시장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루비니 교수가 자신의 발언이 과장, 왜곡됐다면 진화에 나섰지만 오랜 기간 밝은 소식에 목말라하던 투자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발언을 아예 낙관적 기대 회복의 계기로 삼아버린 듯하다. 실물 부문에서도 기업들의 깜짝 실적(earning surprise)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껏 부추기고 있다.

실물경제가 본격적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는 증거가 좀 더 확보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옳겠지만, 현재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과 더불어 최근 투자심리 회복 추세를 판단해 보건대 이번 주식시장 강세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과잉유동성 공급에 따른 자산거품, 실물경기와 금융간 괴리, 시장의 탐욕을 제어할 금융감독의 실패 등 이번 금융위기를 유발한 근본 원인들이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 이번에도 역시 유동성 공급을 통해 표면적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정책은 ‘노끈’과 같아서 이를 잡아당길 경우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만, 밀어 붙인다고 침체된 경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극복 과정에서도 금융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ess)

에 지나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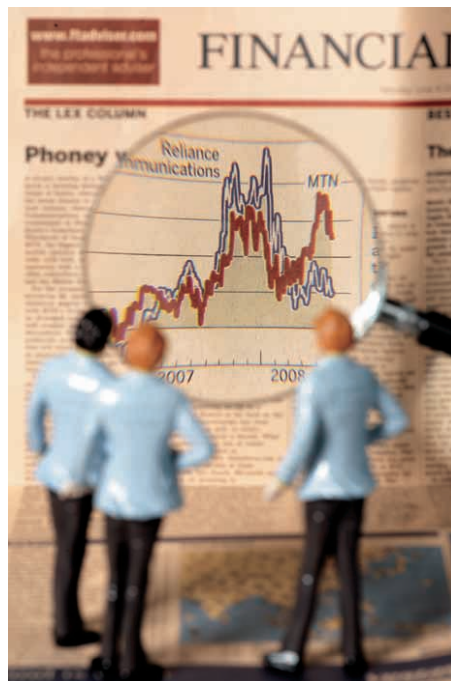
시장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즘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금본위 제도’가 있다. 한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에 비례한 만큼 통화를 공급하도록 한 이 제도는 사실상 정부에 의한 재량적(裁量的) 통화정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금본위 제도 하에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에서 금의 채굴을 늘리거나, 국제수지 흑자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금을 이전 받은 경우에 국한한다. 이로 인한 통화증발(通貨増發)은 국내물가를 상승시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따라서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금본위 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이른바 재량적 통화정책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과잉유동성 공급에 따른 자산시장 거품 형성 등 잘못된 통화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금본위제의 부활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금본위제가 갖는 아쉬운 점 또한 만만치 않다. 실물경기가 활성화돼 이에 합당한 양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지만 금본위 제도 하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또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통화정책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실물 경제의 적정선을 지킬 수 있는 모범을 찾아내야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다.

정책에만 의존하거나 아니면 고전학파의 주장대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시장의 자연치유능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 하에 금본위 제도는 소멸되고 후속으로 탄생한 것이 이른바 ‘브레튼우즈 체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금에 연동시켜 상시적 태환(兌換)을 가능토록 하고, 기타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에 연동시킴으로써 금본위 제도 하의 통화정책이 갖는 지나친 경직성을 일부 완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지출 필요성을 겪게 된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마구 찍어내 결국은 금에 비해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시장에서 금 태환(兌換)요구가 폭발하자 미국정부가 이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사실상 끝났다.

이후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은 사실상 정부의 자유방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 통화주의자들(monetarist)은 실물경제 성장에 비례하는 정도만큼의 통화 공급을 아예 규정으로 못 박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안에 든 막강한 통화정책 권한을 놓고 싶지 않은 정부와 어려움에 직면해 단기적 대증요법이라도 좋으니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하는 포퓰리즘이 영합되면서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은 세를 얻기 어려웠다.

그 다음 역사는 최근의 생생한 기억 속에 있다. 1987년 주가 대폭락, 1990년대 IT거품 붕괴, 911 테러 등 경제위기 국면마다 유동성 공급의 통화정책은 약방의 감초마냥 등장한다. 페니실린이 최초의 항생제로 등장했을 때 만병치유의 영약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통화정책은 이후 여러 번의 경제위기를 넘기

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새롭고 강한 항생제가 신종 악성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탄생시킨 것처럼 통화정책을 반복적으로 과잉 의존한 것은 결국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골병든 경제를 낳고 만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상이다. 유동성 공급은 더

이상 투자와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실물경제와 괴리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가져온다. 거품이 붕괴되려 하면 실물경제가 연쇄 붕괴될까 두려워 다시 유동성공급을 통해 이를 막는다. 포퓰리즘의 압박은 정확한 시점의 출구전략 시행을 어렵게 하고 이는 또 다른 거품의 재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은 안타깝게도 계속되고 있다.

금본위제는 경제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혈압’ 증세의 가능성을 갖는다. 반면 오늘날 우리가 택하고 있는 재량적 통화정책은 필요 이상의 과잉 혈액이 흐르는 ‘고혈압’의 우려를 갖게 한다.

이번 위기에서 나타난 자산시장 거품의 붕괴는 고혈압 악화에 따른 일종의 뇌출혈에 비유될 수 있다.

저혈압과 고혈압, 이들 모두 피해 적정 혈압의 묘법을 찾아 내지 못하는 한 경제위기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만이 궁극적 치유책이 아니라 체질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의 회복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통화정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이제 끊어야 한다. 

금본위제는 경제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혈압’ 증세의 가능성을 갖는다. 반면 오늘날 우리가 택하고 있는 재량적 통화정책은 필요 이상의 과잉 혈액이 흐르는 ‘고혈압’ 우려를 갖게 한다.



김진호 이화여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서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 컬럼비아대에서 재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때 증권회사에서 투자분석, 한국금융연구원 등에서 금융정책 수립도 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금융이야기를 재미있게 설명하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jhkim@ewha.ac.kr

때 : 2009년 7월 17일 오후 2시

곳 : 기획재정부 회의실

참석자 : 김동석 KDI 선임연구위원

이종화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과장

이복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름값, 너무 비싸다구요?

김동석 :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유류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몇 가지 통계자료를 준비했다. 그래프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가격, 그리고 국제원유가격의 추이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7~9월을 정점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국제 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휘발유, 경유의 국가별 가격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는 환율이 많이 올라 우리나라 유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표시돼 있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유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세금의 비율이 약 50%정도 된다. 유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유가상승은 국민경제의 실질구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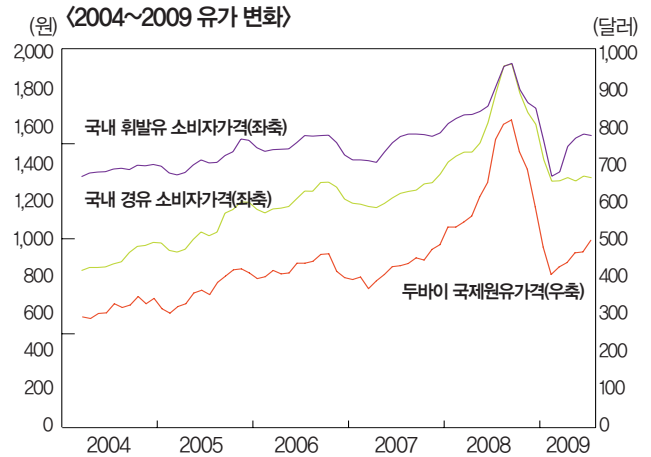


김동석
KDI 선임연구위원
미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이복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자원경제학 박사

축소, 성장을 저하, 기업의 수익률 악화, 물가상승 및 이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등으로 연결된다. 정부에서 유류에 대한 세율을 결정할 때에 어떤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 부처 간에는 어떤 의견차이가 있나?

이종화 : 최근 석유 의존도 하락, 에너지효율성 증가로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유가가 10% 상승하면 성장률이 0.2%p 하락하고 물가는 0.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가급적 유가가 안정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 유가가 급등했을 때 한시적으로 관세 및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로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또한 에너지 수급관리, 세수확보 등의 차원에서도 유류 관련 세제를 다루고 있다. 2000년 수송용 에너지(휘발유, 경유, LPG) 세금을 조정해 유종별로 적절한 상대가격이 유지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 그 사례다. 당시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경유, LPG를 사용하는 차종이 늘면서 에너지 수급구조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2000년 100 : 49 : 38 수준이던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비율을 2007년 100 : 85 : 5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사용행태 변화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즉 유류세 정책방향은 장기적 관점인 에너지 수급관리 측면이 많이 고려될 것이다. 현재 이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유류세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담당하는데, 최종적인 정책 결정에 앞서 다른 부처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다른 부처들의 의견은 소관 업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유류세가 안 오르고를 바라겠지만 에너지 수급관리나 환경을 담당하는 부처는 유류세가 올라 수요가 감소하기를 바란다.

이복재 : 유류세 결정에서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석유라는 에너지의 특성이다. 석유수요는 유발수요이다. 유발수요란 그 재화를 직접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휘발유는 직접 소비하지 않고 자동차를 통해 그 동력을 소비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비탄력적이다. 이를 유류세와 연결시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류세를 올리거나 내려도 그 폭이 미미하다면 소비자의 행태를 움직일 수 없다. 설령 큰 폭으로 세금을 조정해도 그 기간이 단기라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유류세를 통해 소비자의 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가격의 폭이 상당히 커야 하고, 또 장기적이어야 한다. 즉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바꿀 때 연비가 좋은 자동차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환경세란 개념이다. 과거에는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면 석유, 석탄, 가스 등 연료산업을 뜻했다. 하지만 에너지는 빛, 열, 동력을 모두 포함한다. 에너지산업을 연료산업으로 이해해 세금을 휘발유, 경유 등에만 부과시켰었는데 이런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 연료 자체가 아니라 연료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뒀다. 휘발유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휘발유가 자동차에서 동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종화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과장
미 퍼듀대 경영학 석사



김동석 KDI 선임연구원

1978년 미국 MIT의 애델만 교수는 산유국과 석유 수입 국간에 누가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 모델에 의하면 산유국이 유가를 올리면 수입국이 세금을 부과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반면 수입국이 먼저 유가에 국내 세금을 부과해 놓으면 산유국들이 원유가격을 높이는 데 그만큼 부담을 가진다는 것이다. 산유국이 수입국의 유류세가 높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연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국의 유류세를 자국 내 소비자들

이 아닌 산유국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가 결국 산유국에서 가격을 높이기에 부담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세금을 무작정 올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유류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도 이것이 국내 소비자의 부담 경감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다.

김동석 : 최근 국제유가 하락폭에 비해 국내유가 하락폭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1리터당 두바 이유가가 반 이상 떨어져 850원 하던 것이 현재 350원 수준인데 왜 국내유가는 그만큼 하락하지 않느냐는 거다. 하지만 3~4년 동안 국내유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빨리 올라갈 때 국내유가는 느리게 올라갔고 국제유가가 빨리 내려갈 때 국내유가는 늦게 내려갔다. 이는 정부에서 유가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유가가 올라갈 때는 신경 안 쓰다가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만 불만을 표시하는 거 같다. 국제에너지 기구의 통계 자료를 참고해 보면 우리나라 유가 수준은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다. 유가의 절대적 가격을 비교하면 미국·멕시코보다는 비싸지만 유럽보다는 싸다. 국제비교를 통해 볼 때에 현재 국내유가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석유제품 가격 전반 및 주요 석유제품의 상대가격 체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 향후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유류세에 대한 앞으로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이중화 : 각 나라별로 세금 구조가 다르고 정책의 최종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국제비교는 어렵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바로 국내유가가 오르더니 왜 내릴 때는 따라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궁금증에 대한 문의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원유가격과 국내유가를 비교해 보면 반영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유회사들이 국내 석유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매우 단순하고 석유류 가격은 공개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 국내 석유류 가격은 단순히 원유가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유가는 올랐지만 환율은 하락해 국내 석유류 가격은 떨어졌다. 작년 정유 업계는 환차손 때문에 특히 손해를 많이 봤다. 상대가격 체계에서 최근 눈여겨 볼 점은, 과거 환경오염에 영향이 크다고 여겨졌던 경유가 정제기술과 엔진의 발달로 많이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연비도 좋아졌다는 점이다. 만약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앞으로 주목받을 새로운 대체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화석연료의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복재 : 유가가 올라갈 때는 많이 오르고 내려갈 때는 조금 내린다고 해서 비대칭적 구조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정말로 비대칭적인지 연구하고 있다. 사용하는 자료는 200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국내 정유사들의 월간 실제 판매가격이다. 참고로 기존의 다른 연구는 공시가격(정유회사들이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 아닌 기준으로 삼았던 가격)이었다. 아직 연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중간 분석 결과에서의

미 있는 결론을 얻었다.

국제 휘발유 값이 상승할 때 국내 휘발유 값의 상승 폭보다 국제 휘발유 값이 하락할 때 국내 휘발유 값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우리가 말한 비대칭구조의 모습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유가를 자율화시킨 만큼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하지만 정당한 정유업계의 영업 이익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야 한다.

김동석 : 앞서 질문한 유가의 국제 수준 비교에 대한 이



이복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야기를 해달라.

이종화 : 유가를 세전가격으로 보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올해 7월 OECD 평균 휘발유 값은 1리터당 820원, 우리나라는 758원이다. 경유도 1리터당 OECD 평균 820원, 우리나라는 770원이다. 물가나 구매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절대적 비교만을 한다면 유가는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유업계의 정제 기술이 높아싼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며 규모의 경제 덕도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거대장치산업이라 진입이 쉽지 않고 국내 가격이 낮아 수입도 어려워 더 이상 경쟁이 강화될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오히려 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쪽은 유통분야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 정부는 폴사인제 (pole sign system :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한 제도로서 1992년 4월 도입됐다가 작년 9월 폐지)를 폐지했다. 폴사인제로 인해 주유소가 정유회사에 과도하게 종속돼 주유소 간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유회사와 폴사인 계약을 하면서 자금을 융통받는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면 주유소는 정유회사가 제시하는 불리한 조건들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떤 폴사인 주유소는 매일 공급받는 가격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한 달마다 정산을 했던 사례도 있다. 반면, 자기자본으로 주유소를 설립해서 폴사인 없이 운영하는 경우 정유회사들이 제시하는 가장 싼 가격을 골라서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에서 같은 휘발유인데도 가격이 몇 백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차이 때문이다. 근거 없이 정유업계만 비난할 게 아니라 유통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 유통시장의 개선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업계와 손잡고 많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다.

김동석 : 국내 정유 업계에 대해 담합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복재 : 정유회사 판매가격의 결정과정은 굉장히 단순하다. 국제 석유제품가격에 수송비, 관세 및 수입부과금, 국내 유통비를 더해서 소매가가 결정된다. 투명한 구조라 속일 수가 없다. 어떤 업체에선 그 결과가 1이 나왔는데 다른 업체에서 10이 나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다. 비슷한 가격이 형성됐다고 해서 담합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국내 내수시장이 정유업계의 수익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수시장은 그냥 현상유지만 해가는 것이고, 석유제품수출이 정유사의 주된 이윤 창출부문이다. 작년 정유사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58%로서 내수시장의 규모를 넘어섰다. 수출, 해외 석유개발, 석유화학, 유탄유사업 등이 수익원이다. 국내 정유사들의 이익 대부분은 국내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최근 국제유가 하락폭에 비해 국내유가 하락폭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1리터당 두바이유가가 반 이상 떨어져 850원 하던 것이 현재 350원 수준인데 왜 국내유가는 그 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다. 하지만 3~4년 동안 국내유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빨리 올라갈 때 국내유가는 느리게 올라갔고 국제유가가 빨리 내려갈 때 국내유가는 늦게 내려갔다. ”



이종화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과장

이종화 : 담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유가 결정과정은 너무 단순해서 정유회사들 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담합으로 오인할 여지가 큰 것 같다. 다만, 정유회사들 간에 경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복재 : 석유업계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은 전 세계적인 것 같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다. 물론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는 폭리세까지 도입하려고 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

은 정유사들의 실상을 그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아니면 제3자인 소비자단체가 나서도 좋을 것이다. 정부도 국내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2007년 6월에 정유회사의 실제 판매가격을 공개했고 올 5월에는 정유사별로 실제 판매가격을 공개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국내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부문은 정부가 계속 노력해서 찾아나가야 한다.

김동석 :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 정책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밑바탕 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다면 잘 실천될 수 없고 효과도 줄어든다. 국민과 정부, 정유업계가 서로의 소통으로 유류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때 정책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달의 이슈

4대강 어떻게 살릴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지난 6월 8일
확정됐다. 4대강 살리기는 강 중
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
로젝트로 2012년까지 홍수예방, 가
뭄해소, 수질 개선, 물부족 해결을 목
적으로 추진된다. 4대강 살리기 마스
터플랜의 주요 핵심내용을 『나라경제』
가 자세히 들여다 봤다.

2025년 물기근 국가 된다

세계 인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지금도 강 유역에 세계적인 도시들이 번성해 있다. 강은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품격을 높이며,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터전이다.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간 우리는 우리의 강을 방치한 채 버려왔다.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르고, 많이 오면 홍수가 발생했다. 평소엔 오염물질이 모여 들어 악취를 풍기고 생명이 떠나가는 '죽은 강'이 되고 말았다. 유엔의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확보 순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벨기에, 폴란드 등과 함께 '물 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다. 특히 2011년엔 8억 톤, 2016년에는 10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돼 2025년쯤이면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해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 봄철 가뭄으로 강원, 경기 지역 등에서 수만 명이 생활용수는 물론 마실 물조차 얻어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번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로 사상 유래 없는 강우를 기록한 부산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다.

매년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하천변의 무분별한 경작과 비점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하천 내 생태환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흥기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하천 관리는 대부분 제방 위주로 진행돼 정작 하상 관리는 소홀했다. 골재채취의 무절제, 둔치에서의 경작행위와 지자체들의 점용 인허가권 남용 및 하천 구역 내 사유지 무단점용 등이 하상관리에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하천연안의 홍수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상의 준설과 하도정비 중심의 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



을 강답게' 되살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홍수에도 하천 범람의 걱정이 없는 강을 만들자는 데에 시작된 것이다. 

자료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제공

강, 인간과 자연의 공생

2008년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물 분야 전문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을 비롯 문화관광연구원, 환경과학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 환경단체,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지난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아래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주요 전략은 재해 예방에 있어 사후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IT·ET·GT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수변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적 녹색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하상준설, 보설치 등으로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며, 하천변의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통하여 국민들의 여가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 또한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부족 대비 수자원 확보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물 부족과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와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가 실시된다. 먼저 4대강에 보 16개를 설치(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해 8억 m^3 의 용수를 확보할 예정이며, 주변 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보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두 개의 중소규모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해 총 2.5억 m^3 의 수자원도 확보한다.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 17,600개 중 환경영향과 수물면적이 적은 96개를 증고해 2.5억 m^3 의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뭄에 하천유지유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해 예방 위한 홍수방어 대책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에 선제 대응할 대책도 마련된다.

먼저, 퇴적토 5.7억 m^3 준설로 홍수 소통공간을 확보해 홍수위를 0.4~3.9m 낮춤으로써 제방누수와 하천 범람을 방지하는 신개념 치수대책이 추진된다.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설치로 홍수조절용량이 0.5억 m^3 증대될 계획이며, 노후제방 620km를 리모델링해 안전도를 높인다. 특히 낙동강,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로 홍수 피해를 최소화 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낙동강 1.1m, 영산강 0.3m 수위저감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댐 건설과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홍수조절능력 3.0억 m^3 가 확보된다. 하천 합류부에는 본류와 지류가 유수 흐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홍수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도류제가 3개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4대강 사업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은 본 사업, 직접연계사업 및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본 사업은 2011년,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가 시행하며, 사업비로는 16조 9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이며, 그 사업비는 각각 1조 9천억 원, 3조 4천억 원으로 총 5조 3천억 원이 소요된다.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안으로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해 터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해 사업발주하며, 댐·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규발주 하천사업은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보 설치 등 중

〈표 1〉 본사업

구 분	사 업	물 량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국 토 부	준 설	5.7억㎥	0.5	4.4	0.5	0.3
	보	16개	3	8	3	2
	생태하천	537km	127	213	124	73
	제방보강	377km	75	214	71	17
	댐, 조절지	5개	-	3	-	2
	자전거길	1,206km	189	549	248	220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87개	12	31	30	14
환 경 부	수질개선(총인처리)	353개	106	124	99	24

〈표 2〉 직접연계사업

구 분	사 업	물 량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국 토 부	생태하천	392km	66	194	75	57
	제방보강	243km	56	121	46	20
	자전거길	522km	116	194	-	212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9개	-	-	-	9

요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사업 등 단순공사는 지자체가 각각 발주할 계획이다.

발주일정은 기술자수급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1차(던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던키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누어 착공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의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전체를 보상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할 계획으로, 원활한 보상을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한다.

구간별 특성, 소요기간 고려

준설토는 골재(모래)와 사토로 구분해 처리한다. 모래는 지자체와 함께 다수의 적치장을 확보해 시장상황을 고려해 수급을 조절하여 중장기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사토는 4대강 인근 국가산업단지 및 저지대 농경지 보강 사업 등의 성토재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일부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우려하는 생태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부유토사 등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진공흡입식 준설공법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착공 전에 매뉴얼로 마련하여 제공했고 사고 발생시 신속 방제를 위해 '4대강 수질오염 종합방제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니라 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홍수·물 부족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수질개선과 하천복원, 하천변 문화·휴식·체육 공간 조성 등 하천 관련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데에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을 정비함으로써 그 혜택이 전 지역에 걸쳐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녹색뉴딜 사업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제공



안시연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skahn01@korea.kr

수질은 어떤 물을 담느냐의 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는 하천구역 내에 보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를 설치하면 체류시간이 증가하고 녹조 등이 번식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보만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고인물이 썩는다'는 단순한 상식에 기초할 때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를 설치한다고 수질이 반드시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보에 담길 물의 수질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소양호, 충주호의 사례다. 두 호수의 체류기간은 180~480일이지만 수질은 1~2급수를 유지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량 확보와 아울러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개선이 병행된다. 수질개선을 위한 직·간접적인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 및 댐 설치는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해 풍부한 수량을 확보한다. 수질 문제에 취약한 갈수기(매년 11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비가 적게 오는 시기)에 보, 댐, 저수지 등에 모아 두었던 13억 톤의 물을 적절히 흘려보낼 경우 환경 유지용수의 증대로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한다.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TTP(필자주: 총인, 총인은 수중에 포함된 인(Phosphorus) 화합물의 총량을 말하며, 동물의 분뇨, 합성세제, 비료 등에서 배출된다. 조류(algae)와 플랑크톤(plankton)의 주된 영양물질이다.) 등의 수질오염도가 상승추세에 있거나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 대규모 상수원이 있는 34개 중권역을 중점관리 구역으로 선정하고, 이곳에 3조 4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700개 소의 하·폐수처리장 등을 설치한다.

셋째, 총인 제거시설 설치 및 총인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 보 설치로 예상되는 조류의 증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34개 중점권역에 5천억 원을 투자, 353개 소의 하·폐수처리장에 총인 제거시설을 설치하고, 총인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대폭 강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영향>

사업내용	긍정효과	부정효과
보 설치 댐/농업용저수지	- 풍부한 수량(13억톤) 확보 ※ 특히 갈수기 수질개선 효과	- 체류시간 증대로 녹조 우려 ※ 체류시간: 소양호 480일, 충주호 180일(수질 1~2급수 유지)
하도준설	- 퇴적오염물질 제거 - 하천유지용수 추가 확보	- 공사중 흙탕물 발생 ※ 홍수시보다 취수영향 적음 - 하천생태계 교란 ※ 어종복원 등 대책마련
하천내 경작지 철거(1억6천만㎡)	- 비료, 농약 등 비점오염 확기적 저감	없음
총인처리시설 설치(350개소)	- 녹조발생 저감 등 수질개선	없음
환경기초시설(700개소) 방류수 기준강화	- BOD 등 오염물질 제거 - 총인: 2.0 ⇒ 0.2~0.5mg/L	없음

※ 수질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이 대부분임

<수질개선전망>

구 분		2006년	2012년
좋은 물	1ppm 이하(매우좋은)	14	20
	1~2ppm(좋은)	28	25
	2~3ppm(약간좋은)	6	12
	3ppm 초과(보통이하)	1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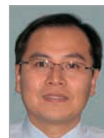
※ '좋은물' 수준이 2008년 75.8%에서 2012년 83~86%로 개선

※ 4대강 유역 66개 권역의 '보통이하' 18개권역중 9개권역이 '좋은물' 수준으로 개선

해 현행 2.0mg/L을 0.2~0.5mg/L로 변경한다.

넷째, 하천구역 내 전체 경작지 1억6천만㎡를 정리한다. 경작시 살포되는 비료(소, 돼지 등의 가축분뇨)와 농약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곧바로 유입되던 것을 전부 제거함으로써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차단하고 이 부지를 친환경적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이상의 대책들을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해 2012년에는 국민들이 4대강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석훈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수질개선팀 사무관
seukhun@korea.kr

농업용저수지 늘려 가뭄·홍수 예방

4대강 살리기는 범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기 위한 종합프로젝트로 수량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수변개발, 지역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대강 살리기의 본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용저수지 뚝높임 사업은 기존 저수지 96개소의 뚝을 높여 물그릇을 키워 물이 부족한 갈수기에 집중 방류해 지류 및 본류 하천의 유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하천의 경사가 급하여 비가 오면 하천으로 빠르게 도달되고, 연강수량의 2/3가 6~9월의 장마와 태풍 기간에 집중돼 크고 작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한다. 반면 갈수기에는 가뭄

이 지속되는 등 물 관리에 불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강의 범람과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물을 다스리고 이용해야 한다. 하천수를 저류함으로써 용수확보와 함께 홍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물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지금까지 많은 댐과 제방 등을 만들고 관리해 왔다.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는 2007년 기준 총 17,649개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4,233개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326개소를 관리하면서 농경지 474천ha에 농업용수 공급과 함께 하류하천의 수질개선, 홍수조절, 생태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천의 환경·생태 보전, 수변공원 등 물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져 물이 가진 다면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환경용수 확보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도 고품질 농산물재배, 생활환경 개선, 농촌



우리나라는 연강수량의 3분의2가 6~9월에 집중돼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반해 갈수기에는 가뭄이 지속되는 등 물 관리에 불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군헬기를 동원해 가뭄이 심한 논밭에 물을 뿌리는 모습.

지역 생활·공업 용수 등을 위한 지역유지용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맑고 풍부한 수자원 확보가 수자원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큰 댐을 설치할 적지 부족, 환경보존론의 대두 등으로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확대해 수자원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 4대강 살리기에 농업용저수지 뚝높임 계획을 반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저수지 뚝높임 사업으로 새로이 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공간은 한강 0.1억 m^3 , 낙동강 1.0억 m^3 , 금강 0.6억 m^3 , 영산강 0.6억 m^3 , 섬진강 0.1억 m^3 등 총 2.4억 m^3 으로 우리나라 장래 물 부족 예측량 약 8억 m^3 의 30%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따라서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가뭄된 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물 부족을 해소하고 홍수기에는 관개기간 동안에 급수로 인해 비워진 물그릇에 2.1억 m^3 의 홍

수량을 저류하여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저수지에서 4대강까지 하천을 따라 흐르면서 지천에서는 건천화 방지, 농어촌지역에서는 환경용수로 이용되어 4대강 유역내 어메니티(amenity, 삶의 쾌적함) 증진, 생태계 및 경관 보전과 더불어 저수지 수변개발도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수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저수지에서는 소수력발전에 의한 청정에너지 생산도 병행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국토보전과 지역발전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립수자원장]



이봉훈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세만금과장
bhlee00@korea.kr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문 화체육관광부는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인 4대강 살리기의 핵심키워드를 녹색성장과 문화콘텐츠로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지역문화 발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유수의 하천개발의 장점을 살려 선진국형 최첨단 강 살리기 모델로 4대강을 변화시키고, 문화의 숨길로 회생시켜 문화생태가 살아 숨쉬는 녹색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할 계획이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의 3대 추진전략은 역사문화적 가치 복원과 재발견, 녹색문화관광 비즈니스 창출과 신성장동력화, 국민 참여의 미래지향적 문화물결 열기 등 'RCC 전략(회복-Restoration, 창조-Creation, 소통-Communication)'이다.

'회복'은 강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사장되었던 역사문화유산을 재발견해 강변의 미래지향적 역사문화경관을 연출하고 역사문화적 장소성 등을 회복시키며, '창조'는 자연유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녹색 문화관광 상품 개발, 디지털 문화 콘텐츠융합 상품 개발, 리버투어리즘 활성화, 특화 문화관광 거점 등을 조성하며, '소통'은 강을 매개로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 문화와 사람, 사람과 자연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4대강과 세계인과 소통하는 강문화를 연출하는 것이다.

현대적 감성 공간 한강 'Art River', 서해안시대 국제교류의 중심 금강 'Gold River', 맛과 멋의 영산강 'Romantic River', 자연과 사람이 숨쉬는 낙동강 'Eco River' 등의 브랜드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금강 지류인 부여 백마강에 띄운 황포돛배가 구드레 나루로 들어 오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관광레저 분야에서 내륙·강·바다를 연결하는 친환경 유람선 관광상품 개발, 역사문화생태 탐방리버워크 조성, 녹색관광·지질관광 활성화 및 체험 관광 상품 개발 등과 스포츠 분야에서 휴식형 생활체육공간인 자전거 테마공원, 자전거 유스호스텔 조성, 4대강 종단 '뚜르드 코리아'의 스포츠 관광 상품화, 수상레포츠단지 조성 등과 문화재·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옛 배길과 나루터 등의 복원, 전통 마을 숲 복원 및 전통가옥·종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녹색 예술공간 조성, 디지털 가상체험 콘텐츠 시범개발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와

의 예산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201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문화관광 일자리 창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국내관광여행 만족도 제고, 국민 해외여행자의 국내관광 전환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국토가 문화와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해 국민들의 심성과 정서에 문화적 향기를 불어 넣고 생활의 여유와 풍요로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



전상덕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사무관
c354411@korea.kr

희망으로 **희망근로** 2009 나다



힘내라,
경제야!

당신을 응원합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2009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09년 6월 ~ 11월 (6개월간)
- 모집기간 | 2009년 5월 13일 부터
- 모집인원 | 전국 00만명
-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자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www.mopas.go.kr 참고

* 기타 신청자격, 선발절차, 근무시간, 임금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34만 개 일자리, 40조 원 생산 유발효과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어제 100분토론 잘 봤다. 설명을 잘하시더라. 거의 잠을 못 주무셨겠다.

눈만 붙이고 왔다. 솔직히 방송은 잘해야 본전이다. 상대측은 한마디 지적하면 되는데 난 훨씬 더 많은 설명을 해야 설득할 수 있다. 방송에서 그만큼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망설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 부정적 효과만 부각돼 있어 오해와 의심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 조금이라도 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100분토론에 참가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진행상황을 소개해 달라. 지난 6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탄기공사는 16개 공정이 진행 중이고 10월부터 착공한다. 일반공사는 11월부터다. 경작지 보상은

감정평가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육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수중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적 합의가 있기 전에 정부가 강행한다는 비판이 있다. 4대강 사업이 그만큼 시급한 사업인가?

그렇다. 4대강 살리기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 강수량과 증발량이 증가하고 또 다시 비가 많아지면서 가뭄과 홍수의 규모나 빈도가 엄청나게 늘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수자원 확보도 중요하다. 댐을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지만 이것은 워낙 장기간의 작업이라 하천에 직접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한 거다. 그럼 수질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일차로 하천으로 들어가는 오염원을 차단할 것이다. 하천 내부의 수질개선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다.

물 문제는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큰 그림에서 숲



심명필 본부장은 수자원공학전문가로서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인하대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01년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반영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직 관급 예우를 맡게 됐다.

을 봐야지 나무만 보고 사업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과거 정부는 제대로 된 하천정비를 하지 못했다. 당장 물난리가 나면 그때는 관리하겠다고 하다가 우선순위에 밀려곤 했다. 2003년 국무총리실에서도 6개월에 걸쳐 수해방지백서를 제작했다. 76개 지역 43조 원의 공공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는데 또 거기서 그쳤다. 하천관리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SOC사업이다. 생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업인 것이다. 정부고속도로, 영종도공항사업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결과를 보면 필요한 것들 아니었나.

그런데 왜 지류가 아닌 본류부터 정비하나, 준설은 왜 또 그리 많이 하나?

본류부터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물그릇을 키워서 물이 쉽게 흘러들어오게 하려는 의도다. 강 관리가 안 되다보니 토사가 쌓여 물그릇이 작아졌다. 하지만 본류와 지류는 단절된 것이 아니다. 굳이 나눌 의미가 없다. 하나의 줄기로 봐야지. 그런데다 홍수를 막겠다고 제방을 쌓아 하천 바닥이 마을보다 더 높은 곳도 여러 군데다. 오래된 제방들은 위험하다. 준설은 쌓여있는 흙을 거둬내겠다는 의미다. 낙동강의 경우 평균 1.3m 준설한다. 그런데 6m씩 파는 것 아니냐고 오해들을 한다. 아니다. 저수로 부분만 깊이 파는 것이지 땅바닥을 다 파내겠다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수질이 나빠질까 가장 우려되는데.

수질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강 유역 약 2만8천 개의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서 각종 오염원이 들어올 수 있다. 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중점관리유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 중에서 도시를 지나는 5개 유역은 특별 관리한다.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원래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

겨 조기 투자하기로 했다.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했다. 준설에 따라 일시적인 생태계 교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첨단 기술도 도입한다. 진공흡입식 준설, 교차준설, 가배수로 설치 등을 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 희귀종 복원 등의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안동의 하회보를 비롯한 몇몇 곳은 여전히 논의 중인가?

뒤늦게 하회마을이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등록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보 설치에 당연히 지역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보 설치를 취소할 수도 있고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

홍수예방과 물 확보라는 목표가 상충되는 것 같다.

상반되는 목표 같지만 둘 다 필요하다. 우리나라 우기의 특성을 감안해 적절히 병행해 운영할 생각이다. 여름철 필요한 용수는 모으되 물을 가득 채우지 않고 실시간 점검하면서 하천 유지유량을 조절할 것이다. 우리나라 홍수기간은 6월말에서 9월에 국한된다. 이때는 특별 물관리가 필요하다. 요즘처럼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고 피해가 발생할 때는 더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이라 예산이 상당하다. 추가비용은 없을까? 예산금액은 22조 2천억 원으로 이미 확정됐다. 본 사업비 16조 9천억 원, 직접연계사업비 5조 3천억 원이다. 수질개선 사업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처음보다 늘었지만 더 이상 늘진 않을 거다. 추가비용에 대한 우려는 농식품부와 문화부에서 시행하는 연계사업을 뜻하는 것 같다. 이것은 각부처 예산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4대강 사업에 산은 아니다. 해마다 하천 유지에 연 3조 7천억 원, 연평균 피해복구비가 2조 4천억 원 들어간다. 이 비용은 그냥 쓰고 없어진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

일각에서는 다른 현안부터 해결하자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공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때마침 국가적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다행이다. 물론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쓰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써야 할 돈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쓰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4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긴다. 이 중 일용직은 전체의 38%, 나머지는 기술직, 행정직, 숙련공 등이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으니 경기부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사업을 마치면 관광, 레저 산업 등 간접 효과도 커진다. 다른 현안들은 다른 해법을 찾길 바란다.

사업을 너무 서둘러 진행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간 하천 정비가 늦었던 만큼 서둘러 즉각적인 대비책을 만드는 거다. 해마다 기후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나. 중요한 하천부터 해보자는 의견도 있는데 홍수문제는 하천 한 두 개 정비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국내 하천이 총 6,500km 정도 된다. 이번에 진행하는 구간은 1,700km에 그친다. 아직도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현 정부가 어느 정도 일단락 지을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본부장을 맡게 되셨나?

학계에서는 하천정비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30년 동안 교수생활을 하다 처음 본부장직을 제안받았을 때 솔직히 약간 망설여졌다. 하지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나라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전문분야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사업은 동백경화에 걸린 우리 강, 훼손된 채 방치된 우리 강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이다. 국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강의든 인터뷰든 열심히 하고 있는 한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 달라. 

강 살려 도시 구했다

한국의 강은 언제부턴가 홍수와 가뭄, 그리고 오염이라는 3중고에 시달려 왔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강을 중심으로 한 치수사업으로서 자연재해를 막고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민 식수원인 강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치수사업으로는 일본 요도가와(淀川)의 하천복원사업, 오스트리아 다뉴브 강의 치수사업, 그리고 서울의 한강과 경남 울산시의 태화강 생태하천조성사업 등이 있다. 국내외 치수사업 사례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미래를 살펴보자.

‘도심의 오아시스’ 요도가와

요도가와 지류는 일본 최대의 담수호인 비와호의 배수로에서 발원해 교토 분지와 오사가 평야를 지나 오사카만으로 흐르는 총 75km의 강이다. 도쿠가와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물자 수송로이자 오사카와 교토를 잇는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근대 철도 개통으로 수운이 쇠퇴하기 시작

했다. 더불어 수력발전 및 관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댐과 부실한 관리는 수질을 오염시키기에 충분했다. 1970년대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썩은 강이 되었다. 오사카시는 버려진 강을 살리고자 1971년 친환경 하천복원 사업을 실시한다. 증대된 홍수량을 소통시키기 위해 최대 4m 가량을 준설하고, 저수로 폭을 120m~300m로 늘려 홍수위를 낮추었다. 덕분에 수질도 개선되고 물의 흐름도 원활해졌다. 현재 요도가와는 ‘도심의 오아시스’라고 불릴 만큼 생명력이 넘치는 강으로 변모했다. 요도가와는 준설을 통한 통수 단면적(필주: 유수의 직각방향으로 자른 횡단면적) 증대로 ‘치수’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다뉴브 강의 친환경 치수사업

오스트리아 빈의 다뉴브 강은 지난 수세기 동안 잦은 홍수로 막대한 재해를 입히는 골칫거리였다. 홍수 조절을 위해 1869년부터 1875년까지 다뉴브 강의 저수로 폭을 넓혔지만 1897년과 1899년에 발생한 홍수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결



지난해 7월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울산 태화강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남참게와 각시붕어 각 1만 마리를 방류했다.

국 홍수방어를 위한 해결책으로 길이 21km, 폭 200m의 '신다뉴브'라는 방수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신다뉴브 방수로는 홍수 저류공간의 확보, 여가활동 기회의 증진, 다뉴브 강 주변의 교통망 연결 등을 가능하게 했다. 1972년 착공해 1992년 완공된 방수로에는 상류 유입시설과 하류 수위조절보가 설치돼 비홍수기엔 다뉴브 강이 호수처럼 보인다. 이 같은 치수사업으로 다뉴브 강과 신다뉴브 방수로 사이에 다뉴브 섬이 생겼다. 이후 방수로의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한 '다뉴브 섬 프로젝트'도 추진됐다. 지표수와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수중생물과 육상 생태계가 연결되도록 했다. 현재 다뉴브 섬은 조류 서식처, 자전거길,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자연친화적인 여가활동을 누리기에 손색이 없다.

휴식공간으로 살아난 한강

한강의 기적은 1982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시작됐다. 이전의 한강은 도시하수와 공장폐수의 무분별한 방류로 수질오염이 심각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골재 채취로 퇴적지형이 형성돼 도시경관마저 심하게 훼손됐다. 서울시의 한강 살리기는 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 보내는 큰 하수도관을 만들어 수질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수로를 정비해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려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한강은 아름다운 수경을 되찾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생명이 숨쉬는 태화강의 기적

울산 도심을 흐르는 태화강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고기잡이와 물놀이를 즐기는 곳이었다. 그러나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하수를 비롯한 각종 오·폐수가 흘러들었고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태화강은 2000년대 초까지 갈수기 수질이 5급수에 육박하는 죽은 강이었다. 태화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와 축산폐수를 차단하는 것

〈울산 태화강 수질 변화〉

연도	수질	상태
1980년~	V등급	강남·북 주거지역 급속팽창으로 수질오염 지속화
~1996년	VI등급	물고기 폐죽음 시민들조차 외면한 죽음의 강 전락
2000년	III등급	행정, 시민단체 등 수질개선 필여성 인식 본격화
2003년	II등급	생활오수 유입차단사업 본격화, 연어 화귀
2007년	Ib등급	저국 수영대회 성공으로 시민 참여 물축제 개최
2009년	Ib등급	정부 '4대강 살리기 모델'로 제시

※ BOD기준 Ib등급(2mg/l 이하) II등급(3mg/l 이하) III등급(5mg/l 이하) V등급(10mg/l 이하) VI(10mg/l 이상)

이 시급했다. 바닥에 쌓인 쓰레기를 걷어내 하도를 정비하고, 공장폐수와 생활오수의 유입을 막기 위한 하수관거도 매립했다. 상류 두 곳에 하수처리장도 만들었다.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한방울도 강으로 보내지 않았다. 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350억 원을 들여 하류지역인 삼호교와 명촌교 8.8km 구간 강바닥에 50cm 이상 쌓였던 오염퇴적물 67만㎥도 걷어냈다.

조금씩 태화강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3~5등급에 머물던 하류 수질은 2005년부터 2등급(좋은 물)으로 바뀌었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996년 '생명체가 거의 살수 없는' 수준(11.3mg/l)에서 2004년 '보통' 수준(3.2mg/l)으로 회복됐다. 이젠 BOD 기준으로 도심을 관통하는 전국의 강 가운데 최고의 수질을 자랑한다. 수질이 깨끗해지자 2006년부터는 태화강에서 방류한 연어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철새들도 2006년 31종에서 2008년 42종으로 늘었다. 2005년부터는 매년 6월 태화강 전국수영대회를 개최해 맑고 깨끗해진 강의 모습을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마지막 씨조개 생산지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

이제 울산은 태화강을 발판으로 깨끗한 산과 강, 바다 등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된 태화강이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사례는 산업과 생태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건설효과보다 운영효과가 큰 사업돼야

4대강 살리기와 같은 개발사업의 경제 효과는 일반적으로 건설효과와 운영효과로 나누어진다. 건설효과란 말 그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실물 경제 효과를 말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의 건설효과는 34만 개의 신규 고용 기회와 40조 원의 생산액 증가로 요약된다.

이 시점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데 4대강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할까? 사업의 필요성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자동차나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기 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에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 준다면 생산액은 4대강 사업보다 10~20% 정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고용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도소매, 숙박 관광업 등을 육성하는 편이 고용을 더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잣대로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게 보인다.

수자원 확보와 수질 향상이라는 핵심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과 지역 경제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 경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우선 수자원이 확충되고 수질이 좋아진다면 이를 어떻게 산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앞에서 거론된 산업들보다 분명히 각각 생산효과 및 고용효과가 크지 않지만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비교적 높다. 단기적으로 지방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도 상당하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건설효과라는 것은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효과의 크기는 단기적으로 중요할지 모르지만 사업의 목적을 생각하면 여기에 커다란 경제적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2013년 이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운영효과다. 정부 계획대로 일단 4대강이 생태적·환경적으로 회복된다면 과연 강 주변 지역의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가?

건설효과가 아무리 크더라도 운영효과가 별 것이 없다면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실물 경제 효과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수자원 확보와 수질 향상이라는 핵심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과 지역 경제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 경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우선 수자원이 확충되고 수질이 좋아진다면 이를 어떻게 산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변 공간을 개발하는 것을 뛰어 넘어 광역적인 구도에서 물 의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물 시장 관리와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동일한 물줄기를 쓰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륙 지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성장축이 해안 지향적이라서 현재 4대강 유역 지역들은 국토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최근 집적과 통합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대표 산업을 근간으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광역권 계획의 선도 산업과 연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수자원 정책과 중추 사업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의사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 계획을 기획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이제부터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세부 프로젝트는 기존의 재정 사업과 동일하게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eujiune@snu.ac.kr

4대강 살리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올 여름에는 물폭탄이 부산을 강타했다. 지난 십년간 거의 매년 어김없이 한두 개의 도시들이 하루 2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그러다가 9월 말쯤 태풍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젖은 물이 모자라 걱정이다. 계곡에는 물이 말라 등산객들은 자신들이 앉아 있는 곳이 한때는 하천 바닥이었는데도 모르고 음식을 나누고 있고, 참게가 하천 상류로 회귀하려다 물이 없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유행처럼 번진 북개철거로 시민들은 도심에서 하천을 접하게 되었지만 눈과 코로 느끼는 우리의 도심 하천은 아직 발을 담그고 싶은 유혹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하천의 문제들을 국가가 직시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의도는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목표는 뚜렷하나 가는 행로는 걱정스럽다.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의 백년지계가 될 장엄한 출발에 박수를 보내야 하지만 섣불리 손바닥이 올라가지 않는다. 정부나 내놓은 ‘보’가 그렇고 ‘준설’이 그렇고, 정치적인 의향이 보이는 ‘임기내 완공’이라는 슬로건이 그렇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하천의 ‘본류’에 십여 개의 ‘보(lower dam)’를 세워 물을 가두고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을 가두는 것은 강의 상류이지 본류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왜냐하면 ‘보’는 협곡의 측면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기에 공사를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정부 계획 중 또 하나의 핵심사항은 ‘준설’인데 강에 홍수공간을 만든다는 안이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준설 후 지반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거 우리가 겪은 경험으로 볼 때 단 한 번의 홍수가 하천의 단면적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꿀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준설된 사면을 유지하기 위해 예상보다 큰 액수의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는 준설 전문가가 거의 없어서 아직 여기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천



지난 1월 환경정화선이 영산강에 버려진 폐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다.

변저류지 등 아직 국내 경험이 미천하여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기술들이 마스터플랜 안에 여기저기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확실성이 큰 사업은 시행착오를 거쳐 적응형(adaptive)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 많은 학자들이 천천히 가기를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4대강을 동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 하나의 유역을 선택하여 보와 준설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평가해 보기를 제안한다.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다른 강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선 추진되는 유역에 대해서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류까지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류는 50%도 채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뭄, 홍수, 수질문제의 해결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유역통합관리’라는 21세기 수자원공학의 키워드이다. 



김명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yokim05@snu.ac.kr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 바
쁘게 뛰고 있는 그들의 어깨에 경
제정책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그들은 바쁘다>에서 그들이 일하
는 현장을 구경해보실까요?

저소득근로자에게 희망을!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민근 씨. 적은 임금으로 월세를 내
며 네 식구가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갑자기 딸이 아파서 수술
을 받았습니다. 돈이 급히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
고 보증을 서줄 사람도, 담보를 할 만한 집도 없습니다.

진영 씨는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됐습니다. 알자리는 생각보다 쉽
게 구해지지 않고 모아놓은 돈도 바닥났습니다. 이제 생활비도 없는
데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다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영
씨만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보증인이나 담보물 제공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실
업자는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 급히 돈이 필
요한 경우 방법이 없어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근로자의
이런 보증부담 해소를 위해 강구된 방안 중 하나가 '근로
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다. 개인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연체나 신용불량, 파산, 면책 같은 신용정보만 등
록돼 있지 않으면



공단이 대신 보증을 서주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001년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바탕으로 시행된 이 제도를 위해 근로복지공단내에 신용지원팀이 결성됐다. 신용지원팀은 단순히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과 결합해 근로자 및 실업자를 위한 장기 저리의 대부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 생계비도 빌려드려요

오전 9시, 업무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용지원팀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한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6개소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사 49개소 행정복지팀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지원팀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전국 각지에서 걸려오는 고객 전화 응대도 이들 몫이다. 곧 팀 양쪽 테이블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의와 회의가 시작된다. 빈자리가 생기면 전화 벨소리가 더 요란해진다. 전화 응대와 업무 진행을 번갈아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해가 진다. 같은 복지사업국 내에서도 가장 바쁘고 요란한 팀으로 유명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서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가 크게 늘어

났다. 그에 따라 대부가 필요한 사람도 급속히 증가했고, 이들을 돕기 위한 신용지원팀의 움직임도 더욱 부산해졌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립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과 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신규 대부사업이 추가됐다.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말 그대로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의 일정으로 팀원들이 뛰기 시작했다.

현재 신용지원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부사업은 이영옥 차장과 정경희 과장 두 미녀 콤비가 담당하고 있다. 세련되고 섬세한 골드미스 이영옥 차장과 터프하고 정열적인 열혈아줌마 정경희 과장은 각각 데이트와 가정을 반납한 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등 일시에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자금을 대부해 주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대부사업을 맡고 있다. 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한 끝에 올 5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

팀 가운데에는 든든하게 신용지원팀의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유쾌 · 상쾌 · 통쾌 박종호 차장을 주축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이자 복지사업국 최고의 베스트드레서 최영규 과장, 굵은일도 묵묵히 처리하는 통계 전문 엑셀맨 장동훈 대리가 있다. 이 '훈남 삼인방(유부남)'은 신용지원팀의 뼈대인 신용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엔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기업 사정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위



해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새롭게 설계하고 시행하는 중이다. 공단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직접 대부 방식의 사업형태로 준비할 것도, 개척할 사항도 많아 사무실에 불 꺼질 날이 없다. 삼인방은 손발을 척척 맞춰 완벽한 '트리플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근로자가 모두 웃을 때까지

신용지원팀의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기둥! 체구는 작지만 다부짐으로 푹푹 뭉친 독순여사 김은경 차장과 뛰어난 정보력으로 무장한 박학다식 이찬희 대리가 있다. 이들은 근로복지사업의 재원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최근 자산운용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근로복지공단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적을 내기도 했다.

항상 바쁘고 정신없는 사무실에 젊음의 싱싱함과 활기를 더해주고 있는 새내기 인턴 박현정 사원, 허우석 사원,



6 최영규 과장
7 김은경 차장
8 장동훈 대리
9 박현정 사원
10 박종호 차장
11 이명옥 차장



1 김현길 팀장
2 허우석 사원
3 정경희 과장
4 이찬희 대리
5 장승희 사원

근로자의 보증부담 해소를 위해 강구된 방안 중 하나가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다. 2001년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바탕으로 시행된 이 제도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용지원팀이 결성됐다. 신용보증과 결합해 근로자 및 실업자를 위한 장기 저리의 대부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장승희 사원도 있다. 이들은 끝없는 도전정신과 주체할 수 없는 끼, 넘치는 의욕을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각종 대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서포터즈 역할을 톡톡히 해내 선배들의 신임과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모든 팀원들이 바쁜 외중에도 단합하며, 더 많은 근로자의 희망을 위해 새로운 사업에 손을 뻗을 수 있도록 하는 열정의 중심에는 믿음직한 버팀목 김현길 부장이 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팀 내 업무뿐 아니라 관련 분야를 폭넓게 살피고 공부하는 학구열까지 갖춰 팀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신용지원팀은 김현길 부장의 트레이드마크인 시원한 웃음소리처럼 대한민국 근로자 모두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다.

글 박현정 신용지원팀 사진 전민규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자

〈궁금하다 북한경제〉는 북한경제의 최근 동향과 이슈를 살펴보는 난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와는 너무 다른 북한사회와 동포들의 삶 통일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한국은행, 고생이 많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래 경제 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북한 스스로 발표하는 경제 통계라고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회의에 보고하는 예산 규모와 간헐적으로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국민소득 정도가 전부다. 그나마 예산은 전년 대비 몇 퍼센트라고만 밝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국제기구 제출 통계는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

북한 경제통계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현재 한국은행이 북한의 경제성장률, 일인당 GNI, 주요 산업의 생산량 등을 매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실적 추정치는 지난 6월 29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전년 대비 3.7% 성장해 2006년(-1.1%)과 2007년(-2.3%)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플러스 성장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은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곡물생산 증가, 6자회담 결과 이루어진 중유 및 원자재 지원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북한 내부의 성장동력이 개선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다.

물론 타당한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을 빼놓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북한주민들의 시장활동이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배급제가 거의 붕괴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시장과 그 주변에서의 장사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북한 노동자의 90%는 시장과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장사행위는 당연히 국민소득을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국가가 밀가루 100원어치를 생산해 배급하면 그것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배급 받은 주민들이 밀가루를 그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빵이나 국수를 만들어서 12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만큼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은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의 이와 같은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정도와 규모를 외부에서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한국은행의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설령 한국은행이 기존에 사용하던 북한경제 추정모델이 정확성을 보유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북한의 변화된 경제 현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아마 한국은행은 이러한 부분을 대충 ‘마사지’ 하는 방식으로 메우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외치고 있는 북한당국에겐 계획경제 밖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골치 아픈 것이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경제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정작업을 해야 하는 한국은행 역시 골치 아픈기는 마찬가지가 되었다. 요즘 코미디 유행어처럼, “한국은행, 니들이 고생이 많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성장률, 일인당 GNI, 주요 산업의 생산량 등을 매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1997년 북한 북부 다지리 마을 주민들이 국제적십자사에서 공급한 밀가루를 배급받는 모습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
jo@ewha.ac.kr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닌 ‘똑같은’ 사람들!

소모뚜(Soe Moe Thu) 이주노동자방송 대표

이주노동자 방송이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요. 최근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려는 방송이에요. 도움이 되는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사회에 우리의 생각과 권리를 아리고 소통하기 위한 거죠. 한국어 포함해서 11개 국어로 방송도 하고 온라인으로 뉴스레터도 보내고, 상근자 4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 참 나쁜 대표죠(웃음). ‘퍼블릭 액세스(필자주: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주장하는 운동)’ 방송국인 시민방송(RTV)을 통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나오던 지원금이 이번 정부 들어 끊겼습니다. 운 좋게도 ‘아름다운 재단’에서 1년 지원금을 받아 운영 되고 있죠. 이 스튜디오를 쓰게 해 준 ‘연구공간 수유너머’에서도 학생, 학부모들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저도 제 돈 쓰면서 대표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후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국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미얀마에서는 제 성격을 맘껏 펼치기가 힘들었어요. 전 자유롭게 말하고 활동하고 싶고, 제 희망을 자유롭게 추구하면서 노력하고 싶는데 나라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자유롭게 사업할 수 없고, 국민을 감시하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는 정부는 부패했죠. 미얀마에도 한국처럼 아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문화가 있어요. 전 여동생 둘이 있는 장남이거든요. 큰 아들이 버젓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여동생들 공부시키고 싶은 작은 욕심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그 때 찾은 유일한 방법이 외국에 나가 일하는 거였죠. 그래서 대학 1학년이었던 95년,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 사신지 벌써 14년째시군요. 지나가면서 보면 한국 사람인 줄 알겠어요. 한국말도 정말 유창하신데요?

처음 취직한 공장에 저 혼자 외국인인이었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일하는 것도,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무슨 의사소통이 돼야 말이지요. 사람들이 저기서 뭐 좀 가져오라고 하면 그걸 못 알아들어서 아예 그분이 가리킨 곳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갖다 드리곤 했어

요. 우리 엄마가 말하라고 입도 만들어주고 들으라고 귀도 만들어줬는데,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한심했죠. 그래서 일만 끝나면 집에 틀어박혀 중고생 교과서 보면서 닥치는 대로 읽고 썼어요. 신문의 영어회화 코너는 한국말과 영어가 동시에 나오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무조건 외웠어요. 한국에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공부만 했죠 뭐. 그렇게 한 6개월 지나니 좀 살겠던데요(웃음).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나오셨더군요. 이주노동자 방송도 그렇고, 인권운동에 밴드활동까지 주제도 다양하게.

한국엔 미얀마 공동체, 네팔 공동체 등 많은 이주민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돕고 교류하고, 국경일을 함께 기념하기도 해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는 이주민들의 생활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저도 그렇고, 이주민들은 모두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그들이 일하던 공장에서 도망나오고, ‘미등록 노동자’, ‘불법 체류자’가 돼 강제 추방되고, 심지어는 자살도 해요. 이걸 아니다 싶었죠.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만든 것인지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한국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야하고, 우리는 그걸 제공하는 대신 정당한 월급을 받고 기술을 배우고, 결국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권리도 없었어요. 꿈이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친구들과 모여 앉아서, ‘우리가 일만 할 때가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이 다치기 전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일했던 공장을 그만두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가하게 됐죠. 방송도, 밴드도 목적은 하나예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애길 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일 뿐이에요.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무엇이 문제던가요?

사실 투자자금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와 같은 단순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유일한 제도가 산업연수생제도였죠. 당시 연수생으로 들어오려면 브로커를

《나는 한국에 산다》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2009년 한국을 함께 호흡하는 외국인들을 만납니다. 5천년 단일민족과 더불어 일하고 배우며 즐기는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한국인,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소모투 대표는 미안마 공과대학 재학 중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한국을 알게 됐다.

통해야 했어요. 브로커에게 수수료, 비자비용, 비행기 값까지 지불해요. 그걸 충당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까지 잡혀요. 그만큼 한국에 희망을 걸고 온다는 거죠. 연수제도는 3년으로 운영되는데 그 기간은 ‘연수생’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없어

요. 기술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월급은 적고, 제때 못 받아도 말도 제대로 못하죠. 어떤 연구결과를 보니 우리 같은 사람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1시간이래요. 한국 직원들과 차이가 나죠. 그러다 연수기간이 끝나면 싼 값에 노동력을 쓰는 이점이 없어지니 회사에서 연수생을 정식으로 채용하는 일은 드물어요. 나름대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한국까지 왔는데,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기술도 못 배운 상황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버티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하다 보니 ‘미등록 노동자’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건데요.

네. 브로커를 통해 들어오는 시스템을 없애고 정부 간의 합의를 통해 인력을 주고 받게 됐죠. 한국 경제가 점점 발전하면서 연수제도만 가지고는 노동력이 부족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줬어요. 고용주가 정부에게 어떤 인력이 몇 명 필요하다고 먼저 신청하고,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맘에 드는 사람들을 필요만큼 골라서 데리고 가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천식이 있는 노동자가 먼지 날리는 가구공장으로 가게 돼 도 방법이 없는 거죠. 일단 고용주에게 선택되면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기술을 꿈꾼 그들에게 고용허가제는 선택권을 허락하지 않죠. 3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고용주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두 달 이내에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해요. 못 구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죠.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를 외치며 서로 사랑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좋아했어요. 뿌리깊은 단일민족주의에서 나온 문화죠. 하지만 그런 민족주의도 ‘인권’이란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주민들은 무엇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도와가며 함께 사는 사람들일 뿐이죠. 단 한 명이라도 그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일은 이제 한국에선 없어야 해요. 한국은 이미 민주화, 선진화된 나라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도 '미등록 노동자'의 신분이신데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위험하진 않으신가요?

하하. 왜 아니겠어요. 한 미안마 친구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에 초청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한국말을 못해 제가 통역해주기로 했죠. 그런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은 외국인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역해주면 출입국법 위반으로 추방하겠다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그 직원께서 정치라는 걸 잘 이해 못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일

하는 모든 활동이 정치 아닌가요? 그런 사소한 활동도 제대로 안되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다 그만두고 미안마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많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면 참 간단하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순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계속 노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가고 있으면 언젠간 목적지에 닿는

것처럼. 처음 한국 왔을 땐 '3년만 있다 가야지' 했어요. 그런데 일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 있다 보니 3년은 훌쩍 지났고, '2002년 월드컵만 보고 가야지' 했는데 아직도 못 갔어요. 한국은 제게 또 하나의 고향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활동도 한국이 싫고 한국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비판이나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든 내 고향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긴 쉽지만,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건 어려워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잘 살면, 그 안에 나도 포함되니 좋은 거죠. 그게 제 희망이에요.

최근 한국사회도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정책이 나오고, 국회에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생기구요.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겪은 일들, 바라는 점들을 기자회견, 세미나, 시민단체들을 통해 글로, 인터뷰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지금이라도 그걸 들어주려고 한다는 게 저희에겐 반가운 일입니다. 지금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이 나오곤 있지만, 그 대상은 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뿐이에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

이 백만 명 정도 되는데, 정책의 혜택을 받는 건 15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90만 이주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요. 한국 경제에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을 배려하는 건 사실 민족주의 성격이 더 강한 거라고 봐요. 정책의 근본은 정말 그들을 한국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한국 정부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정책들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세요?

소화기에 압력을 표시하는 계기판 만드는 일을 해요. 이주노동자 인권운동하면서 만난 선배님의 동생이 운영하시는 회사인데,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는 저 혼자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영향은 안 받으세요?

얼마 전 한국인 직원 3명이 정리해고 됐어요. 그런데 전 제일 마지막까지 남을 자신 있어요(웃음). 사장님이 "너만 있으면 내가 회사를

비워도 마음이 편하다" 하시거든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차별하지 않는 사장님도 훌륭하시지만, 내 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싶으면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배우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 스스로 노력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획은요?

우선 이주노동자방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게 큰일입니다.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좀 더 나은 방송을 만들려고 미디어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방송장비 다루는 법도 배우고 있구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하자마자 산업안전교육을 하루 받게 되는데, 한국어도 서툰 사람들이 하루 배운 것 가지고는 절대 안전하게 일 못해요. 다쳐도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 중입니다. 매년 열고 있는 이주노동자 영화제도 준비 중이에요. 밴드 공연도 해야 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언젠간 잘 되겠지 하는 희망과 기대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라 밖 경제」는 해외 주요 경제저널에서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를 선별하여 발췌, 소개하는 난입니다.

불평등 심화되면 중산층 붕괴할까?

'Has rising inequality destroyed the middle class?', Fobes, June 3rd 2009

지난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중산층 붕괴 논의가 경기침체기를 맞아 다시 주목 받고 있다. KDI가 7월 13일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층과 상류층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중산층 비중은 74.2%에서 63.3%로 10%p 이상 급감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중산층 붕괴를 대서특필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의 진앙인 월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뉴욕대의 토마스 쿨리(Thomas F. Cooley) 경영대학장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미국의 노동계층 즉 중산층에 관한 문제가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GM과 크라이슬러의 파산을 비롯해 제조업 부문의 고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으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간과되는는 안되겠지만, 중산층 붕괴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들이 명확한 분석을 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쿨리 학장은 노동계층이 미국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29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을 근거로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노동계층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부터 2008년까지 약 70%로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로버트 고든(Robert J. Gordon) 교수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즉 미국의 중산층 비율이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문제는 분배의 불평등이 될 것이다. 올해 클라크상(편집자주: 존 베이트 클라크상은 전미경제학회가 획기적인 연구업적을 낸 40세 미만의 소장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노벨상보다 받기 어려운 상으로 유명하다)을 수상한 엠마누엘 사에즈(Emmanuel Saez) 버클리대 교수는 프랑스 국립수리경제계획 응용센터의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와 함께 1913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제청 자료를 이용해 소득분배를 연구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8년 50%에 육박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가 1982년까지는 35%대에서 머물렀는데 2006년 들어 다시 50%수준으로 급등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상위 10%보다는 오히려 상위 1%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 논의의 초점은 중산층의 감소보다는 도금시대(The Gilded Age)의 슈퍼 리치에 맞춰져야 한다. 사실 중산층은 극소수의 슈퍼 리치가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부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 파이의 크기가 고정되었다는 가정의 이야기이며, 실상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20세기 후반에 또다시 도금시대가 재현된 것일까? 그 원인으로 세금감면과 최고경영진의 높은 임금 등을 지적하는 논의가 많지만, 쿨리 학장은 이를 일축하며 기술 변화를 주원인으로 꼽는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적자본을 갖춘 이들은 인적자본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희생을 딛고 부를 축적했으며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1920년대의 첨단 기술은 전기화(electrification)였으며 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최상류층의 소득은 급등했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쿨리 학장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한다. 즉 상류층의 소득이 증가해도 그것은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교육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 전체의 소득이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많은 기술혁신과 교육 투자로 전체 파이를 키움으로써 상류층에 대한 시책의 거품을 꺼트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소 논쟁적인 이 칼럼을 기고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갑론을박이 웹상에서 계속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쿨리 학장이 교육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과는 달리 교육차별 부의 불평등이 잘 나타나는 분야도 드물다는 점이다. 보스턴의 비영리 기관 페어테스트(fairtest.org)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소득 20만불 이상인 가정의 자녀는 대학수학능력시험(SAT)에서 평균 독해 554점, 수학 570점, 작문 552점을 기록한 반면 연간 소득 4만불인 가정의 자녀는 어느 과목에서도 50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했다. 연소득이 2만불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모든 과목에서 460점 미만 점수를 얻었다. 그렇다면 부의 불균형에 대한 쿨리 학장의 해법은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자기당착에 직면하게 된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외신의 한국경제 관련 보도 내용을 분석·정리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epic.kdi.re.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경제 난국 돌파의 최우선 순위는 중산층 구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조현주**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원

스티븐 잡스는 디자인이란 인간이 만든 창조물의 중심에 있는 영혼과도 같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도 부가가치가 가장 큰 분야로 디자인을 꼽았다. 전체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 평균액이 3300만 원인데 비해 디자인 분야 부가가치는 7200만 원으로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나라경제』는 2009년 하반기 연중기획으로 '디자인이 경제다'를 마련한다. 이번 기획을 통해 디자인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보자.

디자인 빅뱅의 시대, 승자는 누구?

구글, 샤넬이 세계를 제패한 이유

〈하반기 연중기획 · 글 쓰는 순서〉

7월 | 디자인의 의미, 경제와의 연관성

8월 | 기업경쟁력의 핵심, 산업디자인

9월 | 생활을 바꾸는 디자인의 힘

10월 | 지속가능한 개발, 도시디자인

11월 | 디자인 인재를 키워라

12월 | 삶을 디자인하자: 디자이너들의 수다

산업디자인은 '바늘에서 우주선까지'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산업 디자이너였던 레이몬드 로위(Raymond Lowet,

1893~1986)가 한 말이다. 산업디자인의 중요성과 폭넓은 영역,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언급이다. 그러나 레이몬드 로위는 오늘날 디자인이 우주선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흐르고 변화무쌍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빠른 속도의 디자인은 '평평해진 지구(토머스 프리드먼의 'Code Green'에서 언급)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창의적인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다음의 변화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글로벌 파고는 빛의 속도로 정보와 사람, 물자와 금융을 순식간에 이동시키고, 그로 인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여기 저기 일어나 산업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산업디자인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산업디자인의 속도도 빨라져서, 내일이면 이미 새로운 디자인에 적응해야 할 만큼 이 지구 상에는 하루에도 수만 혹은 수십만 개의 새로운 디자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창의적인 차별성을 갖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

산업디자인은 '기술과 디자인'의 시대에서 '디자인과 기술'의 시대로, 이제는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기술 수준이 평평해진 이 시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

의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이 내일의 산업디자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되기 때문이다.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구글(Google)'이나 세계적인 패션문화를 선도하는 '샤넬' 그리고 세계적 글로벌 디자인기업인 IDEO처럼 혁신적 아이디어 하나로 전 세계 디자인을 제패하는 곳이 등장한다. 새로운 산업디자인의 물꼬(디자인 르네상스)를 바꾸는 시기가 닥쳐온 것이다. 디자인은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정부와 공공 부분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디자인영역을 무한대로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 IRS(국세청)의 '세금징수 시스템 디자인'과 영국 환자 안전국의 '의료 시스템 프로젝트'와 '범죄방지 디자인'(Design Against Crime), IDEO의 '병원 작업 흐름개선' 프로젝트 등이 중요한 예다. 이것은 디자인이 역사, 심리, 인류, 과학 등과 통합을 이루어 디자이너의 특유한 창의적 시각에서 경영 및 행정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을 종합적으로 이루어내는 방식의 시스템 디자인이다.

우리의 디자인은 하드(기술에 의한 디자인)와 소프트웨어(혁신적 아이디어에 의한 디자인)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는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몇몇 디자인이 글로벌 혜택을 보았으나, 혁신성의 뿌리가 없어 향후 산업디자인은 중대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의 해답은 디자인 정체성에 있다. 이제 한국은 정체성에 입각한 디자인을 세계 디자인 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아야 하는데 한국적 정체성에 입각한 디자인 DNA를 찾지 못해 항상 디자인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정체성은 오랜 기간



한 디자인 DNA를 말하며

이것은 창조적 혁신의 순환을 불러오고 새 시대의 새 공간을 열어나가는 원천이 된다. 디자인 강국이 곧 경제 강국으로 성립되는 시대에 와 있다. 디자인 하나가 수억 원의 제품이 되어 순식간에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기업 및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디자인 가치가 경제나 기술보다 마음 놓고 (경제성에 의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디자인으로) 우위에 놓일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그래야 디자인 강국이 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왜 디자인인가?’ 라는 질문에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헤이즈 교수는 “미래는 디자인의 경쟁 시대고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디자인으로 끝나는 세계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말콤 그래드 웰이 ‘Tipping point’ 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산업디자인을 얇게 조각(Thin-Slicing)내어 새로운 상황과 패턴을 찾아 재구성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1]



동양 역사와 문화가 녹아 든 정신에 바탕을 둔다. 겉으로 드러난 한국적 패턴에 의한 디자인만을 한국적 정체성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역사와 문화가 바탕이 된 디자인교육과 인문, 심리, 과학 등의 잡종교배에 의한 디자인 혁신성의 빅뱅이 일어나야 한국적 디자인 정체성의 확립이 가능하다.

디자인 혁신성의 빅뱅은 디자인 신무기를 만들어 내게 하고 그 신무기가 세계 각국에 뿌려져 새로운 디자인 문화를 정착시키면 거대한 경제적 승리로 되돌아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본의 하라젠야 교수는 본질을 알아야 디자인을 통한 미래 산업을 예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본질은 디자인 정체성에 의



김태호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한국산업디자인협회 회장
kaid@daum.net

“디자인은 기술을 파는 기술”



품질·가격·마케팅을 뛰어넘는 성장 동력

여자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지. 근데 그거 알아?

아무리 배려가 좋아도 예쁘지 않으면 눈길도 안 준다는 거. 무조건 예뻐야 해.

Get a soul!

남자들은 속도에 미치지. 그런데 그거 알아?

아무리 잘 달리는 차도 생에 80%는 서있어야 된다는 거. 무조건 멋있어야 해.

Get a soul!

나경이¹는 TV속 자동차 광고에 흠뻑 반했다. 예쁘고 멋진 디자인을 강조한 것은 물론이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화해 광고를 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그래 맞아, 성능은 기본이고, 이젠 디자인이 중요하지. 도대체 무슨 차야?’

최근 심심치 않게 거리에서 만나는 기아자동차 ‘소울’의 탄생은 지난 2005년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의 결단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 사장은 “품질, 마케팅, 기술, 가격 등 기존 역량만으로는 선진 업체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 요소가 바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을 기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주장하면서 디자인 경영을 도입했다.

기아차, 세계3대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영입

기아차는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피터 슈라이어(Peter Schreyer)를 디자인 총괄담당(CDO)으로 전격 영입하고 아시아-유럽-북미를 잇는 디자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해외디자인 거점의 아이디어를 모아 기아차만의 독특한 디자인 개발에 주력한 것이다. 2007년 ‘직선의 단순화(Simplicity of the Straight Line)’라는 미래형 디자인 철학은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어 내겠다’는 나름의 포부였다. 소울은 이러한 디자인 경영의 결정체라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소울은 유선형 일색인 차량 디자인에서 벗어나 직선형 디자인을 섬세하게 나타냈다. 게다가 적당한 볼륨감을 주어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 기존의 디자인과 다른 다양한 컬러와 내부 디자인도 개성을 더했다. 그 결과 소울은 지난 3월 한국자동차 중 처음으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상(2009 red dot design award)을 수상했다. iF디자인상,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상’은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 제품디자인 부문에는 49개국 17개 분야 3230개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디자인 경영을 주장한 이래 기아차는 내수 시장 점유율 30%를 넘어섰다. 지난해까지 수년간 22~23%에 머물렀던 내수 시장 점유율이 소울과 후속모델인 소렌토, 로체의 출시로 이어지면서 31%까지 급상승했다. 제조업에 있어서 점유율 30%는 해당 시장의 장악력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즉 기아차의 31%라는 기록은 기아차가 독자적인 정체성을 인정받게 됐다는 뜻이다. 소울은 북미 시장에서도 놀라운 판매 행진을 계속



하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대림산업, 청약마감 비결도 디자인?

올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한 또 하나의 주인공은 대림산업의 전기제품이다.

아파트 실내 스위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월패트, 라이트 리모컨 등은 소비자들의 생활 속에 있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대림산업은 기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기존 아파트 내부의 직사각형 디자인에서 벗어나 정사각형 모양으로 변화를 주었고, 각각의 제품을 하나의 디자인 콘셉트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집안 인테리어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했다. 특히 나경이 🧑의 눈길을 끈 것은 라이트 리모컨. 집집마다 리모컨 찾는 일로 소동을 벌이는 것에 착안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한손에 들어오는 크기지만 오투기 모양으로 디자인돼 거실이나 테이블 사이에서도 손쉽게 놓고 찾을 수 있다. 이번 수상 디자인은 7월부터 분양된 신당 e-편한세상 아파트에 적용됐다. 덕분에 이 아파트는 11.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서둘러 청약신청을 마감했다.

김영세 대표, 기술 수준 높아질수록 디자인 비중 커진다

빌 게이츠가 극찬한 아이리버 뒤에는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가 있다. 그는 그의 저서 '이노베이터'에서 기술이 공장과 연구소에서 태어난다면, 디자인은 바로 시장과 소비자에게서 얻어진다고 역설했다. 디자인이야말로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업의 핵심역량이라는 것이다. 디자인은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무형이다. 때문에 디자이너는 수많은 상상력과 경험을 통해 디자인 트렌드, 신상품 시장, 소비자 취향, 기술 흐름 등을 예측해 1년, 2년 후 혹은 그 이후까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을 창조해야 한다. 그것이 브랜드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영세 대표의 지론이다.

좋은 디자인이란 보기 좋고, 쓰기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는 2001년 레인콕과 손잡고 MP3시장을 재편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아이리버 시리즈는 80억 매출의 벤처기업을 수십 배로 성장시켜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후 김영세 대표는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이 가져오는



2007년 9월 '이노' 브랜드 론칭 행사에 참석한 김영세 대표

엄청난 부가가치를 알린 대표적인 CEO이자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렸다.

2007년부터는 지식경제부의 리브콜을 받아 대덕특구 토털 디자인지원사업에 뛰어들었다. 토털디자인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상품개발이 미흡한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신개념 사업이다. 이노디자인은 대덕특구에 'D스튜디오'라는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소비자 조사부터 콘셉트 기획, 제조, 포장, 광고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원천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전략과 디자인 범위까지 설정하는 것이다.

지난 21일은 첫 성과 발표회가 있었던 날이다. 지난 2년간의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들이 전시됐다. 반응은 역시나 기대 이상이었다. 10개 제품모델에 16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향후 매출로 300억 원이 예상됐다. 관람객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 했다. 김영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술 수준이 평준화 될수록 디자인 비중은 커진다. 디자인을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여기는 최고경영자들도 늘고 있다. 우리도 디자인 강국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대덕특구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이 ‘기술을 파는 기술’임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



춘천, 기업을 품다



춘천시 서면에 있는 삼악산에 오르면 의암호와 춘천시내 전경이 한 눈에 보인다.

춘천이 활기차졌다. 기업 이전이 러시를 이루고, 각종 개발 사업이 몰리고 있다. 게다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30분대 접근성을 자랑하게 됐다. 지금까지 경춘 국도를 이용하면 평일 1시간30분, 주말 2~3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춘천에도착할 수 있다. 또한 저렴한 지가,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이전 보상금과 지원시스템으로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다.

고속도로 개통 전에 춘천의 가치를 미리 발견하고 이전을 결정한 기업은 지난 3년간 1백개 기업. 이 중 종업원 50인 이상의 중대형 기업이 30개로 NHN 서비스, 더존IT그룹, 일동후디스, 한화제약, 한서제약, 일화, KD파워 등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기업들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에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대 연구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 바텔과 스크립스 연구소 한국법인이 둥지를 텃다. 그 소식을 듣고 국내 중견 제약회사와 연구소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계적인 연구소 유치 등과 연계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춘천이 이 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춘천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 연구기관을 잇따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데다 인력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스크립스연구소가 들어설 춘천에는 이미 710여개의 바이오 기업이 운영 중이다. 그 중 2006년에 이사진 정도제약을 찾았다. 정도제약의 고향은 경남 진해다. 경남에서 이렇게 먼 강원도까지 어떻게 이사하게 됐냐고 문자문서 혼 팀장은 관련 기반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풍부한 인력을 제때 공급 받을 수 있어서라고 한다.

“한림대, 강원대와 연계가 잘 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실험을 하며 이론보다 실습 위주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죠. 또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 아닌 다른 전공의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만 이곳에서 실습한 학생의 대부분은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하이테크벤처타운 내에는 40여 개 바이오 회사들의 금융·기술·마케팅을 지원하는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다.

춘천은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 중 환경관리 최우수 자치단체(그린시티)로 선정됐다. 쓰레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춘천을 벤치마킹하러 온다. 춘천은 3년 전만 해도 다른 자치단체와 다를 게 없었다. 그러나 혁신적 제도와 주민들의 실천으로 친환경도시가 됐다. 지난해 도입한 쓰레기수거 정책은 음식물쓰레기 문전 수거제, 종량제봉투에 담아 마을 어귀에 버리던 배출 방식에서 전용배출 용기를 나눠주고 문 앞에 내 놓으면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골목마다 설치했다.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는 30%이상 줄고, 재활용품은 40%이상 늘었다. 제도 개선이 시민들의 의식을 바꾼 것이다. 지난해 쓰레기를 20%줄인 것에 자신감을 얻어 올해는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벌



1 후평동 하이테크벤처타운 내 입주한 청도제약 실험실.
2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7월15일 개통됐다. 수도권과의 30분대 접근성으로 춘천은 수도권과 이웃도시가 됐다.



이고 있다.

춘천에는 국내 유일의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다. 로봇 태권V에서 최신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애니메이션의 역사가 한 눈에 펼쳐지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 또한 춘천은 세계적인 인형극의 중심지이자 어린이를 위한 문화 예술의 중심지다. 국제적인 인형극 개최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는 인형극장이 있는데 춘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이다. 인형극장 옆에는 약 340㎡의 공간에 국내외 200여 점의 인형과 각종 인형극 관련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춘천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구봉산. 높이 441.3m, 봉우리가 아홉 개다 해서 구봉산이라 불려왔다. 지금은 구봉산 아래로 동면 감정리와 동내면 학곡리를 연결하는 춘천 외곽 도로가 훤히 뚫려 있다. 서울에 남산타워가 있다면 춘천에는 패러글라이딩으로 더욱 유명해진 구봉산 전망대가 있다.

춘천의 대표 먹거리는 닭갈비와 막국수다. 닭갈비가 유명한 것은 예전부터 춘천에서 양계산업이 성행했기 때문인데 도계장도 많았단다. 메밀은 뿌러만 놓으면 손이 가지 않아도 잘 자란다. 우리나라 제1의 메밀생산지인 강원도 메밀제분의 중심지가 춘천이었던 덕에 막국수가 탄생했다. 춘천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댐은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이다. 의암댐이 생기면서 의암호가, 소양댐이 생기면서 소양호가 생겨 춘천은 호반의 도시로 불리게 됐다. 그중 춘천을 감싸고 있는 의암호 안에 그 유명한 ‘중도’ ‘위도’ ‘붕어섬’이 자리해 있다.

3 국내유일의 애니메이션 박물관. 로봇태권V부터 최신 애니메이션까지 한자리에 모여있다. 진디발 개릭터 모형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아이들.



춘천에 호수를 보러 왔다면 빠지지 말고 들려봐야 할 곳이 바로 공지천이다. 오랫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공지천 정비사업을 벌여 지난해에는 원창저수지 물을 끌어와 흘려보냈다. 여울과 소가 만들어지면서 물고기가 늘고 새가 찾아들었다.

아직도 ‘춘천’이라고 하면 닭갈비나 막국수가 떠오르는가?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외에선 이미 춘천은 차기 세계 레저총회 개최지, 호수를 끼고 있는 관광도시,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바이오산업·제약 연구도시로 알려지고 있다. 춘천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30분 시대

착공 5년 만에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감회는?

늦은감이 있지만 춘천뿐 아니라 영서 북부권 지역의 숙원이 해결돼 굉장히 기쁘다.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난 옥동자를 보는 것 같다고나 할까?(웃음) 뿌듯하고 기대가 크다.

고속도로 개통이 춘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춘천과 서울이 30분대 거리가 됐다. 인천, 수원을 물론이고 웬만한 수도권 위성도시보다도 가까운 거리다. 우선은 기업 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은 수도권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가 굉장히 싸다. 거기 에다 2천만 수도권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쾌적한 도시 환경,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기업입장에서 춘천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 사람과 자본의 유동이 늘어나 관광, 레저, 축제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아직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불만들이 많은데?

민자로 건설이 돼서 요금이 비싼 게 사실이다. 당초 협약금액이 5,200원이었는데, 고속도로주식회사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6,900원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했다. 조기 착공에 따른 이익, 공사비 절감분 같은 인하요인을 찾아내서 1,000원을 낮춰 5,900원이 됐다. 춘천권 주민에게는 할인제가 적용돼서 5,200원이다. 11월 중 주말주중 차등 요금제가 실시되면 주중에는 5천 원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 가격은 춘천JCT까지의 요금이고, 강촌IC를 이용하면 4,500원, 남춘천IC를 이용하면 5,400원이다.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중에서 2012년 개통되는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가장 싼 금액이다. 한편 민자고속도로와 국가고속도로의 요금 격차가 커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고속도로통행료 형평을 위한 법률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장 취임 후 이룬 성과는? 가장 주력했던 시책은?

시장이 되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일자리 창출이다.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평생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다. 지난 3년 동안 중대형 기업 30여 개를 포함해서 1백여 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 중에는



이광준 춘천시장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국의 바텔사, 스크립스연구소 한국법인도 포함돼 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기업을 끌어들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여러 곳 만드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이전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전기업지원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산업단지만만 든다고 기업이 이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과 그 가족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공원과 녹지를 많이 만들어 지난해에는 전국 최고의 환경도시로 선정 됐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도 중대형 기업들을 많이 유치했다. 비결은?

도시 규모와 재정 측면에서 보면 춘천과 수도권은 다윗과 골리앗이다. 규모로는 경쟁이 되질 않아 기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의를 다했다. 외형적인 유치 조건보다는 향후 잠재력과 투자 가치, 기업과 동반 성장하려는 춘천시의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기업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기업주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 것도 한몫 한 것 같다.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인가?

올해는 춘천의 변화를 시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하고 싶다. 임기에 연연해 실적을 보이는데 급급하지 않고 춘천발전의 토대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찬찬히 마무리 하겠다. 

〈이코노미스트가 추천하는 'it' book〉은 경제서가 딱딱하고 재미 없다는 고정관념을 바꿨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꼭 집어주는 경제서로 폭넓은 경제학 독서를 즐겨보세요.

과학에서 배우는 삶의 교훈 ‘지루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제임스 듀이 왓슨 지음 / 김영남 옮김 / 도서출판 이레



서평을 부탁 받고 책 두 권을 놓고 고민했다. 하나는 마크 펜의 '마이크로 트렌드: 세상의 물을 바꾸는 특별한 1%의 법칙'으로 번역된 책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소개하려는 책이다. '지루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의 저자는 DNA 나선 구조를 발견해 크릭, 윌킨스와 함께 1962년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이다. 제임스 왓슨은 전형적인 과학자다. 처음에는 이 책이 너무 딱딱해서 '마이크로 트렌드'를 서평으로 소개하려고 했다. 마이크로 트렌드의 저자인 마크 펜은 여론 조사의 대가로서 클린턴의 1996년 대통령 선거 때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선거 전략을 세워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다. 이후 힐러리 클린턴의 경선을 도왔으며 지금은 세계적인 홍보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두 권 모두 읽고 마음이 바뀌었다.

마이크로 트렌드는 여론조사가 전공인 사람이 쓴 책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반면 이 책은 성공한 과학자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학자가 되기 위해서, 학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고 지도교수는 어떻게 선택하고 조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귀띔한다. 책의 가치로서는 마이크로 트렌드와 비교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없이 자란 오바마 대통령은 '길리아드'를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한다. 길리아드는 50세에 아들을 얻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앞으로 학자가 되고 싶다면 혹은 자식을 학자로 키우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내 생각에는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은 과학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학문적인 소양을 쌓는 일은 학계를 떠나 다른 일을 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학문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이 책의 가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데에 있다.

저자는 학문 분야와 학교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분명히 시대에 앞서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라고 충고한다. 지도교수는 창의적인 활동이 왕성한 젊은 교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무엇을 배울 것인지 확고한 생각을 갖고 대학을 선택하라고도 권한다.

과학은 극도의 사교적인 행위다. 과학자들에게 수다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 매력적인 인품과 사교성은 학문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어떤 집단에 속해 새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의 두 손은 묶인 것이나 다름없다. 지적인 자극을 주지 못하는 지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찾으라는 조언이다.

저자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가르치는 시카고 대학의 교육이 자신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자기 나름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지 않고서는 남보다 앞서기는 어려운 법이다.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낄 만큼 대단한 목표를 정하고 그게 지켜워지기 전에 연구 분야를 바꾸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각 장마다 각 단계에서 중요한 점 몇 개의 포인트로 새로 정리해놓았다. 만약 당신이 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책은 매우 필요한 책이 될 것이다. **[한줄]**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고용과 실업 등 노동시장을 연구하며 다양한 사회문화현상, 특히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한국인의 성씨 (姓氏) 중에서

구 드윤센	마 르센	설 리번	우 르비나	채 들리
고 바야시	모 하메드	신 시아	유 스케	태 하다
나 투아르	문 타리	심 머	이 사이	표 트르
노 리스	배 일리	송 가	조 쉬	피 케
도 밍게스	백 웰	안 테르손	주 디스	하 랑
라 흐만	사 비트리	오 리코	지 토	한 센
류 코비치	서 지오	옥 타비아	차 베스	허 지스

외국에 살면 외국인이고 한국에 살면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끼리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와 언어가 조금 다르고, 피부색도 약간 다르지만,
 우리땅에 사는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민족과 인종을 넘어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우리사회!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행복한 길입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수원성과 우리의 영혼

수원 화성에 올랐다. 수원 사는 선배는 화성을 꼭 보여주고 싶다며 자랑스러워했다. 밤에 오른 화성은 무척 아름다웠다. 정교하게 쌓은 성곽이 조용하게 잠든 성안 마을을 감싸고 있고, 2백 년 전 성밖 별판이었을 바깥쪽은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시가지였다. 건축학적인 가치야 내가 알 길이 없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란다.

성곽을 걸으며 나는 정약용을 생각했다. 스물한 살에 열 살 위 정조 임금을 처음 만난 이래, 정조가 죽자마자 마흔에 시작된 귀양살이까지 그는 관료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다.

수원을 최초의 계획도시로 만들려 했던 정조의 명으로 화성을 건설하면서 그는 인부를 고용해 노동량에 따라 품삯을 쳐주었다. 백성의 강제노역이 당연하던 시대에 성과급 제도를 시행한 셈이니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사회과학자인가.

새로운 지식에 대한 흡수력 역시 관료로서의 능력을 배가시켰을 것이다. 그는 화성을 쌓기 위해 기증기를 개발해 국가재정을 크게 절약했다. 정조는 서양과학자가 쓴 기계 관련 궁중 비서(秘書)를 정약용에게 주면서 기증기를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임금은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이면서 자연과학에까지 조예가 깊었고, 정약용은 그 뛰어난 지도자의 비전과 식견을 현실에 구현시킨 도구였던 셈이다.

그렇다고 그가 맹목적인 도구였던 것은 아니다. 본인 스스로 최고의 정책설계자로서 귀양생활 18년 동안 강도 높은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목민심서는 백성의 생활을 살피고 헤아리는 것이 관료의 존립근거라는 관점에서 당시의 정책 실패를 통렬히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학문에 대한 그의 시각 자체가 매우 참여적이었다. 문학에 대해서조차 그는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에 분노하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정부 출범 이후 때로는 자조적으로, 때로는 패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막스 베버는 '어떤 철학의 정부든 관료는 전문성으로 정부를 뒷받침할 뿐 개인적인 선호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관료제의 속성'이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랬거나 말거나 공공부문의 한 사람인 나는 이 말이 싫다. 아니, 이 말에 묻은 비난과 자조가 싫다.

지난달 이코노미스트지는 현재 각국 재정 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중 영합적인 정치가들이 스스로의 선심성 정책을 견제하는 법률을 만들려 하는 것을 오디세우스에 비유했다.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노랫소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배 기둥에 꽂꽂 묶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중 영합적인 정치나 이를 막기 위한 경직적인 법률 모두 국가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가들은 본질적으로 대중영합적일 수밖에 없으며, 실제의 정책과정은 대부분 이들 포퓰리즘과의 지난한 싸움이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실용의 정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을 지키며 정책을 개선시키려는 공공부문의 영혼이라고 생각한다.

위기 이후의 출구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지금, 굳은 심지가 다시 필요해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뿌리는 것은 쉽지만 거두어들이며 경제를 다지는 것은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은 그래서 강인하고 맑은 영혼만이 지킬 수 있는 목표다. 수원성곽을 걸으며 다산과 우리의 영혼을 생각한다. 박영준



물은 아껴도 공익광고 아이디어는 아끼지 마세요!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공익광고 축제가 시작됩니다.

27년 전통의 '대한민국 공익광고대상'이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로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창작 공모전입니다.
2009년 주제는 "물"입니다. 물 만난 여러분의 **水**만가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총 상금 1억 4천 4백만원(대상 3천만원) ● 응모 자격 일반부(대학원생 포함) · 중·고 및 대학생 ● 응모 주제 물 수자원 절약, 수질보존 등 ● 접수 기간 2009.8.17~8.31
● 접수 및 문의 한국방송광고공사 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실무기획단 T.02) 731-7429~33 (후 100-7480)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1층

*자연사랑은 홈페이지 참조 www.kobaco.co.kr www.psafestival.or.kr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서민금융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신용 7~9등급 근로자도 500만원까지 대출 (신협 6.30~, 농협·우리 7월~, 국민 8월~)
-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기관 300곳 확대
- 노점상·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3.4조원 추가(6월)

✓ 서민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0~4세의 50%는 보육시설·유치원비 전액 지원(7월)
- 차상위계층의 0~1세는 집에서 돌봐도 10만원 지원(7월)
- 소득3분위 가구의 대학생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2학기)

✓ 암환자, 어린이의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인하(7월)
-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12월)
- 한의원 물리치료 및 어린이 충치 홈 메우기 보험적용(12월)

✓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좀 더 쉽도록 하겠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분양·국민임대주택의 10% 배정(8월)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8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주택임대료 16% 인하
-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곳 현대식 화장실 설치

✓ 영세상인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대형마트 진출시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 운영(7월)
- 전국 전통시장 공용 상품권 발행(7월)
-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의 주부인턴·취업훈련 확대(7월)

반갑네요,
딱 나를 위한
정책이네요!

www.mosf.go.kr/hope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가족부 / 환경부 / 여성부 / 국토해양부 / 금융위원회 / 중소기업청